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의안 번호	1926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 동 결 과 보 고 서

활동기간 : 2025. 6. 12. ~ 2026. 6. 1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JEONBUK STATE COUNCIL

제2기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면서...





서난이 위원장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끝까지 책임감 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종복 부위원장

공공기관 이전과 교육 경쟁력 강화는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인 만큼, 전략적 대응과 지속적인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전주권 광역 교통망 구축은 전북 균형발전의 핵심 축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

전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군 연계, 나아가 초광역권 연계를 위한 교통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성수 위원

동부권을 비롯한 도내 전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인권 위원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가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전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 결실로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윤수봉 위원

전북특별법 특례 확대와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나가야합니다.



이명연 위원

전북형 인재 육성과 공공기관 및 도내 기업 취업 연계를 강화해 청년 유출과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장연국 위원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기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북만의 전략과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형열 위원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대광법 개정 성과가 실질적인 전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응과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져야 합니다.



한정수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사진



【 제1차 회의 】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출범 (2025. 06. 16.)





【 제2차 회의 】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1차 업무보고 (2025. 07. 23.)









서난이 위원장



최형열 위원



정종복 부위원장



이명연 위원



국주영은 위원



김동구 위원

【 제3차 회의 】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2차 업무보고 (2025. 11. 28.)









서난이 위원장



윤수봉 위원



이명연 위원



장연국 위원



국주영은 위원

【제4차 회의】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2026. 06. 1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 난 이 위원장



【간담회】 전북 균형발전 정책 주요현안 공유 (2026. 02. 0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정책 토론회 】 성공적인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골든타임과 전략 (2026. 01. 20.)






성공적인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골든 타임과 전략


성공적인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골든 타임과 전략

【정책토론회】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2026. 01. 22.)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AI반도체신산업 전환시대, 새만금은 무엇을 할것인가 (2026. 03. 05.)







【결의안】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국주영은 위원) (2025. 07. 25.)

- 전북특별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정과제 반영 촉구





【도정질문】 제41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정종복 부위원장) (2025. 06. 11.)

-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최형열 위원) (2025. 10. 20.)

- 전북광역교통망 확충 끝이 아닌 시작, 사활걸어야







【5분 자유발언】 제424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난이 위원장) (2026. 02. 06.)

- 전북 1특의 새로운 발전전략, 전북-세종 초광역초단축 30분 교통망 제안







-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

활 동 결 과 보 고 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제출)함.

2026. 6. 10.

위 원 장 서 난 이

부위원장 정 종 복

위 원 김 동 구

위 원 김 성 수

위 원 윤 수 봉

위 원 이 명 연

위 원 장 연 국

위 원 최 형 열

위 원 한 정 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귀하

목 차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29

1.1. 구성 목적 31
1.2. 구성 경과 32
1.3. 위원회 구성 32
1.4. 활동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 33
1.5. 활동 기간 33
1.6. 중점 활동 방향 33

제2장 **주요 활동 상황** 35

2.1. 특위 활동 일지 37
2.2. 회의 개최 40
2.3. 간담회 개최 58
2.4. 토론회 개최 59
2.5. 성명서·입장문 72
2.6. 결의안·도정질문·5분자유발언 80

제3장 **주요 활동 결과** 91

3.1. 특위활동 성과 91
3.2. 특위활동의 아쉬운점 96
3.3. 정책제언 97
3.4. 맺음말 100

제4장 **부 록** 101

4.1. 전북특별자치도 업무보고 자료 103
4.2. 간담회 자료 131
4.3. 주요 일간지 보도내용 143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1.1. 구성 목적 31

1.2. 구성 경과 32

1.3. 위원회 구성 32

1.4. 활동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 33

1.5. 활동 기간 33

1.6. 중점 활동 방향 33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1.1. 구성 목적

○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보다 확대된 고도의 자치권 보장에 따른 도의 높아진 경쟁력을 기대한 것과는 달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여전히 각종 산업과 교통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요소들에서 배제되며 소외된 지역의 저발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함.

○ 또한 당시 대통령 공약사항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2023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에 전북특별자치도가 배제되는 등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역시 개정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됨.

○ 이에 민생과 경제를 살릴 동력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등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의 2차 이전 유치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에 필요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인 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우리도의 균형발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1.2. 구성 경과

○ 구성발의 : 서난이 의원 외 7인 발의(2024. 9. 26.)

○ 의안심사 : 제41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2025. 3. 24.)

○ 발의의결 :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5. 4. 3.)

○ 위원선임 : 제4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5. 6. 25.)

1.3. 위원회 구성

○ 위 원 수 : 11인(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9)

○ 위원 명단(소속 상임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 원 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 원 회
위 원 장	서 난 이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 종 복	기획행정위원회	위 원	김 성 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 원	최 형 열	기획행정위원회	위 원	이 명 연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 원	국주영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 원	장 연 국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 원	김 동 구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 원	한 정 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 원	나 인 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 원	윤 수 봉	교 육 위 원 회

○ 활동지원

-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 최 월 하
- 예산결산 전문위원 : 김 형 완
- 직원(10) : 담당직원 6, 속기사 1, 방송요원 1, 사진기사 1, ENG 1

○ 운영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4. 활동 대상기관 및 사무 범위

가. 활동대상 기관

○ 중 앙 : 국회, 중앙부처 등

○ 지 방 :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

나. 사무 범위

○ 공공기관 유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및 금융산업 육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추진 현황 점검·대응, 국토교통부의 지방국지도 구축 등 전북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 및 현안 사무 전반

1.5. 활동 기간

○ 2025. 6. 12. ~ 2026. 6. 11.

1.6. 중점 활동 방향

○ 공공기관 2차 이전 동향 파악 및 관련 부처 대응 활동

○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및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유치활동 전개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촉구

○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추진 현황 점검·대응

○ 국토교통부의 지방국지도 구축 관련 활동 전개

○ 기타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현안 파악 및 언론 대응 등

제2장

주요 활동 상황

2.1. 특위 활동 일지 37

2.2. 회의 개최 40

2.3. 간담회 개최 58

2.4. 토론회 개최 59

2.5. 성명서·입장문 72

2.6. 결의안·도정질문·5분자유발언 80

제2장 주요 활동상황

2.1. 특위 활동일지

《 특위 구성 》

○ 2024. 9. 26. : 서난이 의원 외 7인 발의

○ 2025. 3. 24. :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운영위원회 심사
(제41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 2025. 4. 3. :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2025. 6. 12. :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11명)
(제4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2025. 6. 16. : 특별위원회 위원장(서난이) 및 부위원장(정종복) 선임
(제419회 정례회 제1차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 회의 개최 》

○ 2025. 6. 16. :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25. 7. 23. :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논의
- 1차 업무보고 청취(기획조정실, 건설교통국, 기업유치지원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 2025. 11. 28. :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2차 업무보고 청취(기획조정실, 건설교통국, 기업유치지원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 2026. 6. 10. :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간담회 개최 》

○ 2026. 2. 6. : 전북 균형발전 정책 주요현안 공유 간담회 개최

- 도 균형발전 정책 주요현안 공유·점검 및 대응방향 모색 등

(기획조정실, 미래첨단산업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 토론회 개최 》

○ 2026. 1. 20. : 성공적인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골든타임과 전략

- 참석대상 : 30여명(주제발표 2, 토론 6, 특위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 주요내용 : 도내 인프라 활용 및 산-학-연 생태계 연계를 통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확장과 관련 기업 유치 전략 모색 등

○ 2026. 1. 22. :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 참석대상 : 20여명(주제발표 3, 토론 5, 특위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영농형 태양광 도입 방안 및 농민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수요 기업 유치 실현 논의 등

○ 2026. 3. 5. : AI·반도체·신산업 전환 시대, 새만금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 참석대상 : 20여명(주제발표 3, 토론 3, 특위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거점 육성을 위한 핵심사업 실행 및 전략산업 유치, 송전망 부담 완화 대응방안 등 논의

《 성명서 · 입장문 》

○ 2025. 8. 20. : 농촌진흥정 일부부서 수도권 이전계획 철회 요구 성명서 발표

-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의 수도권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2026. 2. 25. : 전북 금융중심지 반대에 대한 입장문 발표

- "전북 금융중심지 반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 결의안 · 도정질문 · 5분 자유발언 》

○ 2025. 7. 25. (결 의 안) : 전북특별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정과제 반영 촉구 결의안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2025. 6. 11. (도 정 질 문) :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5. 10. 20. (5분 자유발언) : 전북광역교통망 확충 끝이 아닌 시작, 사활걸어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026. 2. 6. (5분 자유발언) : 전북 1특의 새로운 발전전략, 전북-세종 초광역초단축 30분 교통망 제안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2. 회의 개최

2.2.1. 제1차 회의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5. 6. 16.(월) 13:4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3층)
○ 참석현황 : 10명
- 특위위원(10) : 서난이 위원장, 정종복 부위원장, 나인권, 이명연, 국주영은, 최형열, 김동구, 장연국, 한정수, 김성수 위원

○ 안　건
① 위원장 선임의 건　　② 부위원장 선임의 건
③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

Ⅰ 회의 내용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Ⅱ 회의 결과

○ 제1항 : 위원장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 선임
○ 제2항 : 부위원장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 선임
○ 제3항 :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Ⅲ 기타 협의사항

○ 제2차 회의 일정 협의 : 2025. 7월 중
-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 및 업무보고 추진

2.2.2. 제2차 회의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5. 7. 23.(수) 10:2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3층)
○ 참석현황 : 12명
- 특위위원(8) : 서난이 위원장, 정종복 부위원장,
최형열, 한정수, 국주영은, 김동구, 이명연, 장연국 위원
- 전북특별자치도(4) :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 이현서 정책기획관, 김형우 건설교통국장,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 안　　건
①「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②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주요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

Ⅰ 회의 내용

○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 방향 보고 및 논의
○ 전북 균형발전 관련 현황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응답

소관부서	보 고 내 용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공공기관 추가 이전 ·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 정책 관련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응 관련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유치과)	· 기회발전특구 추진 관련
기업유치지원실 (금융사회적경제과)	·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등 금융산업 육성 관련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총괄지원과)	· 5극3특 공약 관련 전북도 준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	· '서울대 10개 만들기' 준비 관련

Ⅱ 회의 결과

○ 제1항 :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 제2항 : 업무 보고 청취

Ⅲ 질의 . 답변내용

〈 최형열 위원 〉

○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추진되며, 전북도에서도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55개를 선정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각 기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정책기획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관이 지방 이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음. 다만,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전북의 이점을 부각하고, 제시하고 있음.

○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구성 경위와 유치 활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5회의 유치 활동 추진 실적은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판단됨.

◘ (정책기획관) 정부의 방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구성하였으며, 유치추진단 공식 활동 외에 수시 유치활동을 하고 있음.

○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구성은? 실질적인 조직 운영과 더 공격적이고 계획적인 공공기관 유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정책기획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기업유치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소관 실·국장들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 공공기관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음. 각 실·국별 수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진했던 부분은 지휘부를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겠음.

○ 각 실·국별로 해당 기관을 상대로 유치 활동, 계획, 전략, 추진 실적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망.

◘ (정책기획관)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겠음.

〈 정종복 부위원장 〉

○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정확한 진단과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 전북의 유치 희망 우선순위인 농협중앙회의 유치 가능성은?

◘ (정책기획관) 농협중앙회는 1차 이전 기준과 법령상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지속적으로 접근하고자 함.

○ 전남도 농협중앙회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정치권과 협력하여 촘촘한 계획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함. 의회도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나설 것.

◘ (정책기획관) 한국마사회나 농협중앙회는 법 개정 발의를 진행한 바 있고, 전남쪽에서도 추진 동향이 있었음.

○ 농협중앙회 같은 기관들은 법상 공공기관과 분리해서 이전계획을 잡았으면 좋았을 것. 향후에는 전략적 대응을 해주길 바람.

◘ (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음.

〈 이명연 위원 〉

○ 총 몇 개의 기관 중 우리도에서 55개 기관을 선정한 것인지?

◘ (정책기획관) 공공기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따라 다름. 공운법*상으로 하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법상 대상기관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의 성격으로 보아 대상을 파악하였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

○ 막연하게 선정하기보다는 유치 가능 여부나 우리도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유치 희망 기관을 정해야 할 것.

◘ (정책기획관) 2003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기관의 성격을 띤 대상 기관을 300여 개로 추렸고, 말씀하신 농생명이나 금융 등 우리도 연관 기관과 건설, 환경 등 분야를 고려하여 55개 기관을 선정하였음.

○ 많은 기관이 오면 좋겠지만, 막연한 노력보다는 집중할 필요가 있음. 대상 기관, 추진 방식, 협조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함.

○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 중인데, 올 3월부터 11월까지 동부권 발전 계획 연구용역을 또 추진하는 것인지?

◘ (정책기획관) 동부권 사업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번 연구용역은 제4차 동부권 계획 수립을 위한 것임

○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는?

◘ (정책기획관)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해서 수립하고 있음.

○ 동부권 특별회계와 관련 조례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동부권이 도내에서 열악한 지역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이었으나, 지금은 동부권뿐만 아니라 전북 전역이 어려움에 처해있음. 동부권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14개 시군 전체에 대한 균형발전 고민을 해야 함.

◘ (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동부권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

○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이 결정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3차 지정 예정이 있는지?

◘ (기업유치지원실장) 지방시대위원회 서면심의 지연으로 8월 10일 이전 통보가 예상됨. 3차 지정은, 현재 실무적으로는 준비하고 있으나, 지방시대위원회의 인적 개편과 정책 변화 추이를 지켜봐야 함.

○ 전북도의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여짐. 타지자체 현황 등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했으면 함.

◘ (기업유치지원실장) 보완하여 보고드리겠음.

○ 전북 출신의 정부 장관,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다수 계심으로써 어느 때보다 도의 균형발전 정책과 국가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적기라고 생각함.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북의 미래를 만드는 기초 단계라 생각하며 더 적극적으로 특위,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같이 노력했으면 함.

〈 국주영은 위원 〉

○ 대광법 관련해서 지금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 추진중인지?

◘ (건설교통국장) 지금 국토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우리 도에서는 국토부 계획에 전주권의 광역교통시설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을 발굴하고 있음.
사업 발굴은 도와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익산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별도로 도에서 국토연구원의 용역을 통해서도 사업을 발굴하고 있음.

○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50만 이상이 기준이니까 도내에서 전주시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 (건설교통국장) 전주시를 중심으로 인접 시·군인 완주, 김제, 익산이 해당함.

○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만 해당되는지?

◘ (건설교통국장)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나, 현재 그렇게 보는 게 맞음.

○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이 다 포함되어야 도내 균형발전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봄. 14개 시·군을 다 넣어서 교통망 체계를 고민해야, 당장 사업 시행이 안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교통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함.

◘ (건설교통국장) 대광법이 올해 4월 개정되면서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14개 시·군으로 확대했을 경우 지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또한, 타지역과의 형평성과 대도시권 지정 지역에 대한 내부 지침상의 예산지원 한도 때문에 국토부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함.

○ 전문가들은 전주를 중심으로 14개 시·군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반드시 필요하고, 교통을 기반으로 한 교류가 14개 시군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하고 있어 고민이 필요함.

◘ (건설교통국장) 대광법 개정에 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것, 그 외 국토부에서 수립하는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이나 우리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도로건설 관리계획 같은 시군간 연계 교통망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 '금융중심지'에서 '금융특화도시'로 정책의 명칭이 달라진 이유는?

◘ (기업유치지원실장) 대통령 공약에서는 '금융특화도시 조성'으로, 후보자 시절에는 '제3 금융중심지 도약'으로 발언한 부분이 있어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위와 계속 소통하며 병행하여 전달하고 있음.

○ 전북특별법에 금융산업 육성 특례가 들어 있는데도, 특정 시기가 아닌 지속적인 활동이 미진했다고 생각함.

◘ (기업유치지원실장) 금융위에서 요구한 인프라 문제, 분야별 금융모델 구체화와 이행계획 제시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였고,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공청회와 의회 보고를 진행한 뒤 금융위에 제출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 금융중심지 지정이 된다면 한국투자공사나 공제회 등 유관 공공기관들의 전북 이전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이번 폐회 때 결의안을 제출하려고 함.

◘ (기업유치지원실장) 한국투자공사와 기타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의 도내 이전을 위해 지속 설득 중이며, 결의안 제출은 큰 힘이 될 것임.

〈 김동구 위원 〉

○ 대광법 관련해서 본 의원은 3개시(전주, 익산, 김제), 1개군(완주)으로 진행을 하되, 후속 조치로 나머지 시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함. 일례로 군산의 경우 국가산단과 항만, 향후 설치될 공항까지 연계해 광역 교통망 계획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고민해주길 바람.

◘ (건설교통국장) 국토연구원의 용역을 통해서 해당 부분들도 포함안 방안들 마련할 예정임.

○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이전에 이전 정부에서는 글로컬 대학 사업을 시행하였음. 도내 전주대와 호원대가 컨소시엄으로 예비 선정을 위해 추진하던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전주대, 호원대와 소관부서가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 국회의원 등을 통해서도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11일날 실행계획서 제출 전 상임위 의원님들께도 설명드릴 예정임.

○ 글로컬 사업 이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후속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가 세부적인 고민을 통해 사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할 것.

◘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으며, 지역에서 대학과 협력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통령이 공약1호로 해수부 부산 이전을 말했고 급속도로 추진하여 부산 동구 이전이 확정된 것. 장관들 임명이 마무리되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함. 도에서 안일하게 생각하지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략적으로 실행해 줄 것을 당부드림.

◘ (정책기획관) 예. 노력하겠음.

○ 특례 및 권한이양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갈등이 있음. 중앙정부에서 우리의 요구를 많이 들어주지 않았던 것. 전북은 균형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여건을 어느정도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정책 실행 능력은 전북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설명이 필요함.

◘ (정책기획관) 특례 관련해서는 업무적으로 가중되는 부분이 있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중앙과 도가 갈등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 (정책기획관) 특례를 받아오면서 재정이나 조직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음.

○ 전북도의 인구와 산업구조 등 기본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 기획조정실에서 준비하는 것이 있는지?

◘ (정책기획관) 인구와 산업 등 관련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실·국과 협조해서 대응해 나가겠음.

〈 서난이 위원장 〉

○ 지금이 정치권에 가장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이며, 대통령 타운홀 미팅도 예정되어있고, 지방시대위원장 역시 누구보다 균형발전에 관심이 큰 분이 임명되었음. 이런 호재인 상황에서 위원님들과 모든 공직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함.

○ 산업은행 이전을 요구했던 부산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가져왔고, 현재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거론되니 전남에서 유치경쟁에 뛰어들었음. 전북도는 무엇을 유치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농생명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북 이전을 제시

해야한다고 생각함. 익산의 식품클러스터, 농수산대학교, 관련 연구원들이 결집되어있음.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만 그 다음에 다른 제안도 가능할 것이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만 이 호기를 놓치지 않을 것.

○ 메가비전 프로젝트에서도 K-문화올림픽 산업 거점 조성을 추진하는데 케이팝 아레나 관련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함. 체육경기장의 음향시설이 아닌, 국제 공연이 가능한 규모의 공연장을 고민해야할 것. 관련해서 답변바람.

◘ (정책기획관) 여러 이슈에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좀 더 촘촘하게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함.

○ 아레나 국가공모에도 도전하지 않았었음. 새만금 항만을 통해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 공연장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공연장의 티켓파워를 통해 도시브랜드 제고도 가능함. 추진이 안될까봐 규모를 줄이는 것은 애매함. 큰 틀에서 고민하고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야 함.

○ 금융도시 관련해서 국제금융센터 조성과 카카오엔터의 데이터센터 건립은 어떻게 있는지? 협약관련 이행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 (기업유치지원실장) 금융센터는 협약을 맺고 이행조건인 건물 입주수요 90% 확보가 되지않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관련해서 계획을 일부 수정을 준비중임.

○ 당초 협약은 금융센터와 데이터센터를 연계해 추진하는 구조였는데, 이런 상황이면 데이터센터의 부지만 제공해주는 것이 아닌지? 두 사업을 유기적으로 묶어 함께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음.

◘ (기업유치지원실장) 금융센터와 데이터센터를 연계한 기존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계획을 보완·조정하면서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음. 또한 상임위원회와도 협의를 통해 연내에 구체적인 방향을 공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먼저 짓기 위해 여러 가지와 함께 협약하여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음. 반면에 금융센터는 투자 유치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사업인 만큼, 우리가 반드시 연계하는 구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결국 부지만 제공하게 될 수 있음. 우리 도가 확보할 수 있는 실익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기업유치지원실장) 해당부분을 유념해 실질적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해나가겠음.

〈 한정수 위원 〉

○ 특별자치도 출범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를 한 것이 특별회계임. 특별회계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우리의 대응이나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람.

◘ (정책기획관) 특별회계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일부 있음. 제주·세종은 일부 확보 사례가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특별회계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필요성과 실효성을 건의하며 협의 중임.

○ 결과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익이 불명확함. 권한 이양도 중요하나 이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이 미흡한 점은 문제로 보임.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함.

◘ (정책기획관) 예. 노력하겠음.

○ 송전망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체 지역이 검토되고 있는데, 새만금 RE100 산단과 연계해 삼성과 접촉하는 등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실제로 기업 접촉해 본 적 있는지?

◘ (기업유치지원실장) RE100 선언 기업 리스트 확보해 놓은 상태임. 기업유치 차원에서 준비 하고 있음.

○ 유치를 위한 준비 말고 실제 접촉했는지 묻는 것임.

◘ (기업유치지원실장) 현재 구체적 계획이 없어 직접 접촉은 하지 못한 상태임.

○ 그게 문제라고 봄. RE100 산단을 언제까지 만들지도 불명확한 상황임. 목표 시점을 정하고, 국가 지원·한전 역할·법 개정까지 포함해서 전략과 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함. 그다음 기업에 제안하면서 유치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 것임. 사전에 접촉해서 기업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야 함.

◘ (기업유치지원실장) 현재 준비 중인 단계라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함.

○ 조속히 구체적 계획 수립하고 실행 전략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 (기업유치지원실장) 보고드리겠음.

〈 장연국 위원 〉

○ 대광법 관련하여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5년간 조정할 수 없는 것인지?

◘ (건설교통국장) 변경한 사례는 없었음.

○ 혹시 우리 14개 시·군중에 올림픽 개최 지역을 알고 있는지? 아직은 미확정이나 전북이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봄. 개최지 선정에 대비하여 도로망, 숙소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함.

○ 이런 점을 반영해서 대광법 시행계획 수립 시 전북의 특수 여건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음. 14개 시·군 전체 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전략적 반영 필요하다고 봄. 용역에도 포함해 검토해 줄 것을 건의드림.

◘ (건설교통국장) 군산, 전주, 무주 등으로 알고있음.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현재 추진중인 국토연구원 용역을 통해 검토하겠음.

2.2.3. 제3차 회의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5. 11. 28.(금) 14:2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3층)

○ 참석현황 : 11명

- 특위위원(7) : 서난이 위원장,
  최형열, 국주영은, 김성수, 이명연, 장연국, 윤수봉 위원
- 전북특별자치도(4) :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 이현서 정책기획관,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김정중 교통정책과장

○ 안　　건 :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주요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

Ⅰ 회의 내용

○ 전북 균형발전 관련 현황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응답

소관부서	보 고 내 용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 상황 ·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 정책 추진 · 5극3특 관련, 전북도의 전략 방안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대광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 상황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유치과)	· 기회발전특구 추진 관련
기업유치지원실 (금융사회적경제과)	·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 상황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총괄지원과)	· 5극 3특 관련, '전북특별법' 개정 추진 상황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	· '서울대 10개 만들기' 준비 관련

Ⅱ 질의 . 답변내용

〈 서난이 위원장 〉

○ 5극3특으로 압축되어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인구수로 비교했을 때 더 소외될 우려가 있어 대응전략이 더 중요해 질 것. 추진중인 용역 외에 달라진 사항은?

◘ (정책기획관) 이재명 정부에서 2차 이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관련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 조달청 공고 등 진행중임. 우리도는 기존 55개 기관을 선정하여 대응하였으나, 핵심기관과 앵커기관을 중심으로 집중하기 위해 전북연구원과 고도화 용역을 추진중임.

○ 바이오와 인공태양까지 연이어 전북에서 사업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모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도민들의 상실감이 클 것. 타운홀 미팅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전략적인 준비와 대응을 당부드림.

〈 이명연 위원 〉

○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 특별회계로 6개 시·군에 지원하고 있는데, 단순 투자로만 그치고 사라지면 의미가 없음. 현재 매년 추진되는 사업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있는지?

◘ (정책기획관) 매년 사업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4단계 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제성 분석을 철저하게 추진하였음. 현재 5개 사업이 도 예산심사에서 탈락했고, 해당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보류한 상황임.

○ 지역 발전과 소멸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집행하는 것인 만큼, 예산이 땅에 스며들기만 해서는 안될 것.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평가를 하는 것보다 집행 전 계획부터 집행가능한 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정책기획관) 사전평가를 더 철저하게 대응하겠음.

○ 기회발전특구는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끝난것인지?

◘ (기업유치지원실장) 계속 추진중임.

○ 전북에서 많이 챙겨야 할 것임. 14개 시·군 컨설팅과 적극적인 참여 지원을 당부드렸음에도 큰 성과를 내지 못했음. 지속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면 좋겠음.

◘ (기업유치지원실장) 지속적으로 시·군과 함께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전북의 지정면적은 비수도권중 중간정도에 해당함. 지방시대위원장도 새만금 지정을 권유 하였으나 도에서 전략적으로 미뤄둔 상태임. 전주, 군산, 익산 제외 나머지 시·군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남은 면적을 새만금에 신청 할 생각임. 최근 동부권쪽에 특구지정시 입주의사가 있는 기업과 협의중임. 시·군과 협의하여 전략적으로 철저히 대응하겠음.

○ 전북이 세입원을 발굴할 수 있는 일들을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안타까움. 탄소섬유 사례도 그러함. 기회발전특구로 4곳 정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함.

◘ (기업유치지원실장) 시·도별 상한인 200만평 중 현재 95만평이 남았음. 동부권과 서남권쪽으로 시·군과 협의하여 내년도 신청을 준비하고 잔여 부지는 새만금쪽으로 신청하여 소진할 계획임. 열심히 노력하겠음.

○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안에서 15개 이상 광역도로, 광역철도, 차고지, 환승센터 등 사업 발굴 시 기준이 있었는지? 지정된 사업들이 확정 사업인 것인지?

◘ (교통정책과장) 시·군 수요조사 후 도의 용역업체에서 조사를 통해 발굴한 사업임. 현재는 미확정으로 국토부에 제출한 사업이며, 국토부에서 기재부 협의를 통해 2026년 상반기쯤 몇몇 사업을 확정 반영할 예정임.

○ 이 중에서 몇 건이 반영되는 것인지?

◘ (건설교통국장) 국토부와 기재부가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몇 건을 반영할지 정해질 것. 4차에서 보면 광주권의 경우 도로 1건, 철도 1건 등 반영되어 많이 반영되는 편은 아님.

○ 공영차고지도 마찬가지로 국토부와 기재부 협의로 결정되는 것인지?

◘ (건설교통국장) 예. 차고지는 30%국비 지원을 받고있음.

○ 공영차고지 중 완주 봉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국비 반영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내용이 사업계획안에는 들어있으나 국비반영 계획이 없음.

◘ (건설교통국장) 신청하지 않았으나,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후 신청 시 반영 가능할 것.

〈 국주영은 위원 〉

○ 금융특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금융중심지와 금융특화도시 차이는?

◘ (기업유치지원실장) 금융중심지가 법정개념임. 그간 포괄적인 의미로 금융특화도시 용어를 써왔으나 금융위 신청시 금융중심지로 신청함.

○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도시계획 심의가 12월 예정인데, 이 개발계획안이 금융센터를 포함한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인지?

◘ (기업유치지원실장) 해당 개발계획에 금융센터를 포함한 금융 중심의 정주여건과 금융기관 및 주민 편의시설, 도로 교통, 교육 등 반영되어 있음.

○ 금융중심지 개발 예정지인 혁신도시와 만성동 일대가 정주여건이 뛰어남에도 대중교통은 개선할 부분이 있음.

◘ (기업유치지원실장) 금융센터 추진이 어려운 이유는 금융중심지 미지정으로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임.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강력한 인센티브로 기관유치가 보다 용이해지고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 과거 두 차례는 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식 심사를 받은 적 없었으나 이번에는 1년간 준비한 개발계획서를 금융위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며, 6개월 내 결과가 도출될 것. 이번 신청을 '마지막 승부'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 요청드림.

○ 개발계획안은 도 자체 도시계획 심의 이후 금융위에 제출되는지?

◘ (기업유치지원실장) 본회의 의결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한 뒤 금융위에 제출하는 절차임.

○ 그간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을 잘 준비 해주길 바람. 재생에너지 사업도 전 정권에서 예산이 줄어들어 우리는 중단했었으나 전남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당부드림.

2.2.4. 제4차 회의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6. 6. 10.(수) 13:3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3층)

○ 참석현황 : 8명

- 특위위원(8) : 서난이 위원장, 정종복 부위원장,
김동구, 김성수, 이명연, 장연국, 한정수, 윤수봉 위원

○ 안　　건 :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Ⅰ 회의 내용

○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경과 보고(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위원들의 추가·보완사항 의견 개진

Ⅱ 회의 결과

○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2.3. 간담회 개최

2.3.1. 도 균형발전 정책 주요현안 공유 간담회

간 담 회 개 요

○ 일　　시 : 2026. 2. 6.(금) 10:30
○ 장　　소 : 특별위원회 간담회장(3층)
○ 참석현황 : 9명
- 특위위원(6) : 서난이 위원장, 정종복 부위원장
최형열, 이명연, 장연국, 한정수 위원
- 전북특별자치도(3) : 김철태 정책기획관, 양선화 미래산업국장, 문성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 주요내용 : 도내 균형발전 주요현안 업무보고 사전 논의 및 의견수렴

Ⅰ 간담회 내용

○ 전북 균형발전 관련 주요현안 공유 및 질의 응답

소관부서	보 고 내 용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대응 계획 및 추진 현황 · 정부 통합지자체 인센티브 공표에 따른 대응 현황 ·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미래첨단산업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관련 대응 및 추진 현황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총괄지원과)	· 전북특별법 개정 및 3특(전북-강원-제주) 협력 추진 현황

○ 타운홀 미팅 추진 관련 대응 현황 공유 등

Ⅱ 간담회 결과

○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
- 타운홀 미팅 등 균형발전 현안 성과 제고를 위한 도-특위 공조활동 논의

2.4. 토론회 개최

2.4.1. 성공적인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골든타임과 전략 토론회

개 요

○ 일 시 : 2026. 1. 20.(화) 16:30~18:00

○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

○ 주 관 :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위 서난이 위원장,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연구원

○ 참석대상 : 20여명(특위 위원 및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도내 인프라 활용 및 산-학-연 생태계 연계를 통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확장과 관련 기업 유치 전략 모색 등

Ⅰ 주제 발표 내용

○ **(발표 1) 반도체 유치 전략 및 해결과제(이지훈 전북연구원 주축산업팀장)**

-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유치 가능성을 진단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 여건과 산업단지 인프라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특히 RE100 대응이 가능한 전력 체계 구축 필요성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망 확보·용수 공급·입지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인프라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단계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략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안함.

○ **(발표 2) 새만금 기업 유치를 위한 해결 과제와 전략(이범순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통상닥터)**

- 기업 유치의 핵심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는 전력 수급 불확실성과 투자 리스크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함. 전북이 보유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산업단지 인프라를 연계하여, 반도체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력 공급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함.

Ⅱ 토론 주요 내용

○ **(좌 장) 전북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서난이 위원장**

-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전력과 용수, 신속한 인허가, 안정적인 산업 인프라가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대표적인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새만금이 보유한 재생에너지 기반과 광활한 산업용지를 활용한다면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구조를 분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함.

- 또한 RE100 대응이 필수적인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경쟁력은 반도체 기업 유치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용인반도체 산단보다 전북 새만금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함. 아울러 전북형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힘.

○ **(토론 1) 산단 입주처 및 기업 유치 계획, 용인반도체 산단 관련 대응**
(전북특별자치도 신현영 기업유치과장, 최재길 이차전지탄소과장, 배주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 새만금 및 도내 산업단지의 입주 가능 업종과 공급 여건을 점검하고,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단계별 유치 전략과 타깃 기업군을 구체화하고 있음.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경쟁·보완 관계를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할 예정임. 전북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넓은 부지, 물 공급, 신속한 인허가 등 차별화된 강점을 중심으로 후공정·소부장 기업 유치 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 적기 구축과 함께 투자 인센티브 확대, 규제 개선,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유치 방안 마련하고 있음.

○ **(토론 2) 기업 애로와 유치 전략 공유(반도체 기업 배석전 PKC 상무, 임세창 제이아이테크 부장)**

-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술과 자본뿐만 아니라 전력, 냉각수 등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다양한 유틸리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실제 기업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투자 애로사항(전력 수급 불확실성, 인허가 지연, 초기 투자비 부담 등)을 공유하였음. 또한 전북이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과 산업단지 인프라를 연계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할 경우, 반도체 완성기업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동반 유치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신속한 행정지원 및 기업 수요 기반의 인프라 선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토론회를 통해 전북이 보유한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산업단지 입지 여건을 연계한 반도체 기업 유치 전략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함. 특히 새만금 지역의 태양광·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한 RE100 대응형 전력공급 모델 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반도체 기업이 우려하는 전력 수급 불확실성 해소 및 투자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

○ 또한 전력·용수·인허가 등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 방향이 마련됨으로써 실질적인 기업 유치 실행력 강화가 기대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차별화된 전북형 전략(후공정 및 소재·부품·장비 중심)이 구체화되어 전북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

○ 아울러 재생에너지 기반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활용하여 반도체 완성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소부장 기업의 동반 유치가 촉진됨에 따라, 산업 집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2.4.2.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토론회

개 요

○ 일 시 : 2026. 1. 22.(목) 14:00~16:00

○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

○ 주 관 :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위 서난이 위원장,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연구원

○ 참석대상 : 20여명(특위 위원 및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전북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현황 및 과제 분석,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영농형 태양광 도입 방안 모색

Ⅰ 주제 발표 내용

○ **(발표 1) 영농형 태양광의 현황과 과제**(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정책과장)

- 영농형 태양광의 국내외 추진 현황과 제도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농지 이용 규제, 주민 수용성, 사업성 확보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함. 특히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지의 이중 이용(영농+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방안을 구체화함. 아울러 새 정부의 '햇빛소득 마을' 정책을 소개하며, 마을 단위의 공공부지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모델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추진 방향을 제시함.

○ **(발표 2) 새만금 영농형 태양광 가치와 비전(공동/ 오창환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한운기 ㈜위에너지 대표이사)**

- (오창환)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입지적 강점을 기반으로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단지 조성 가능성을 제시하고, 단계적 개발을 통해 3년 내 1GW, 5년 내 3GW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발전 시나리오를 설명함.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RE100 이행이 필요한 기업에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산업 유치와 연계된 에너지 공급 전략으로 활용 가능함을 강조함.

- (한운기)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광활한 평지 특성을 활용한 블록 단위의 계획적 개발 가능성을 제시함. 특히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 총발전량, 발전매출, 내부수익률 등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기함.

Ⅱ 토론 주요 내용

○ **(좌 장) 전북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서난이 위원장**

-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모델이라고 강조함. 특히 새만금이 가진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농생명용지의 공간적 특성을 활용한다면, 전북이 국가 탄소중립과 RE100 산업 전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평가함.

-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이 농민 소득 증대와 미래 산업 유치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 공감대 형성과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지원 필요성을 제기함.

○ **(토론1)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현황과 활용 방안(이재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 새만금 농생명용지가 현재까지 조사료 재배 위주의 소극적 활용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농지 이중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다만 농지의 이중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결 과제임을 언급하면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시 농지의 생산성 유지 조건과 허용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또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시 실경작자 및 마을협동조합법인을 허용 주체로 설정하고, 영농 이행 확인 체계를 농관원·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구축해야 한다고 밝힘.

○ **(토론 2) 새만금 농생명용지 영농형 태양광 활용 여부(허행철 농어촌공사 에너지투자부장)**

-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대부분이 국유지로 민원 발생 가능성이 낮고, 광활한 평지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어느 지역보다 신속하고 대규모로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전국 3,400여 개 저수지 및 약 17,000ha의 농지를 활용하여 햇빛소득마을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아울러 현재 새만금 내 송전선 구축 계획이 없어 향후 10년 이내 대규모 재생에너지 송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PPA(전력구매계약) 방식의 직접 전력공급 체계를 조기에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힘.

○ **(토론 3) 새만금 RE100 산단 구성과 영농형 태양광 활용 방안**
(배균기 전북연구원 농생명산업팀장)

-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3년 내 1GW, 5년 내 3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이를 새만금 산업단지에 PPA 방식으로 직접 공급함으로써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RE100 이행이 시급한 기업 유치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함. 특히 국내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부족 및 국내 데이터센터 수전 용량이 2028년까지 약 4.8GW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공급 거점으로 기능할 경우, 전북이 타 지역 발전을 위한 '재생에너지 식민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산업 유치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함. 또한 6~10년 후에는 조력·풍력·수상태양광 등과 연계하여 15~20GW 규모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도 가능해져 전북 전역으로 영농형 태양광 확산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함.

○ **(토론 4)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현황과 활용 방안(김신중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장)**

-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현황과 활용 방안에 대해 도 차원의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관련 제도 정비와 병행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기업 유치를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함.

Ⅲ 기대효과

○ 토론회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의 국내외 추진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농지의 이중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함. 이를 통해 농지 규제, 주민 수용성, 사업성 확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화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됨.

○ 또한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 가능성과 단계적 전력 생산(최대 3GW) 시나리오가 제시되면서, 데이터센터·반도체 등 RE100 이행 기업에 대한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구축과 산업 유치 연계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함.

○ 아울러 '햇빛소득 마을' 등 주민참여형 발전모델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대안임을 재확인함. 이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4.3. AI·반도체·신산업 전환시대, 새만금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 요

○ 일 시 : 2026. 3. 5.(목) 10:00~12:30

○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

○ 주 관 :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위,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새만금 도민회의,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지속가능 발전협의회

○ 참석대상 : 30여명(특위 위원 및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거점 육성을 위한 핵심사업 실행 및 전략산업 유치, 송전망 부담 완화 대응방안 등 논의

Ⅰ 주제 발표 내용

○ (발표 1) 국민주권 시대 새만금 거버넌스 구조 제안과 과제
(양광식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 새만금 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환경·행정·개발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시화지구 사례를 참고하여 행정, 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치 구조를 제안하고,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조정형 거버넌스 운영 방안을 제시함. 특히 법·제도적 근거 마련, 준비기구 구성, 교육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도출함.

○ **(발표 2) 새만금 RE100 산업단지와 영농형 태양광이 여는 국가 균형발전 (오창환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

- 영농형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국가 전력 문제와 지역 불균형 해소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며, 특히 농생명 용지 활용을 통한 대규모 발전과 전력 직접 공급 구조를 통해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을 제안함. 새만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써 새만금의 역할을 강조함.

○ **(발표 3) 기업이 바라는 새만금 RE100 산업단지와 전북자치도의 전략과 과제 (진우삼 한국RE100위원회 위원장)**

- RE100 이행 기업은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입지 결정의 핵심 요소로 고려하고 있어,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생산·공급·산업 입지를 결합한 전략적 산업단지로 조성이 필요함.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 제도적 지원,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요구되며,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전략적 투자 유치 방안 마련을 중요 과제로 제안함.

Ⅱ 토론 주요내용

○ **(토론 1) 해외 사례로 본 새만금 거버넌스 방향**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 해외 주요 개발사업 사례를 통해 공공·민간·지역사회가 함께 참여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화된 협의체 운영을 성공 요인으로 제시함. 특히 의사결정의 투명성,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합의 기반 운영 구조가 필요하며, 새만금 역시 단순 행정 중심이 아닌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안함.

○ **(토론 2) 전북자치도형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새만금 RE100산단**
(이지훈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분산에너지 체계 전환 흐름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형 에너지 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통해 생산과 소비가 연계된 지역 중심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함을 제안함. 새만금 RE100 산업단지와 연계할 경우 에너지 자립도 제고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가능하며, 제도적 특례와 정책 지원을 통한 선도 모델 구축이 필요성을 강조함.

○ **(토론 3) 영농형태양광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RE100산단 지정 전략**
(한운기 ㈜위에너지 대표이사)

-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RE100 산업단지 지정의 핵심 기반으로 제시하며, 경제성 확보와 단계적 개발을 통한 실현 가능성을 강조함. 특히 발전량, 수익성 등 구체적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생산과 산업단지 조성을 연계하는 통합 전략을 통해 새만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안함.

Ⅲ 기대효과

○ 토론회를 통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국가 전략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가 종합적으로 도출됨. 특히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중심으로 '전력 생산 - 산업 유치 - 지역발전'이 연계된 성장이 구체화 되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반도체 등 에너지 수요 기업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 가능성을 확인함. 또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새만금이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마련함.

○ 아울러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하는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방향이 제시됨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기존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시민사회·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이를 통해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해 온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책 결정의 수용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및 주요 정책에 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됨.

2.5. 성명서 · 입장문

2.5.1. 성명서 배포

개 요

○ 건 명 :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의 수도권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참여의원 : 서난이 위원장 등 특위위원 및 도의회 의원 일동

○ 배 포 일 : 2025. 8. 20.(수)

○ 내 용 :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의 수도권 재 이전 계획에 대응하여 계획의 전면 철회와 전북이 농생명 산업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일조할 것을 요구

Ⅰ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조직기능을 통합·조정하는 과정에서 식품기업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식품연구 기능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개편안 확정('25.2.) 및 법령 개정* 추진.

* ①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5.2.25.)(대통령령 제35321호, '25.2.25) / 국단위(부) 재편 및 소관업무 변경, ②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5.2.25.)(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8호, '25.2.25.) / 과단위 재편 및 소관업무 변경

○ 국토부는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어긋나는 개편안으로 반대하였으며, 인사혁신처는 전주 본원-수원 센터 간 동일 인원 이동으로 조건부 찬성하는 등 중앙정부의 의견이 분분하고, 농진청 내부에서도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조직개편이 진행되며 반발이 생기는 등 분란이 야기됨.

○ 또한 농진청의 식품연구 기능 수도권 이전은 정부의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전면 배치되며, 전북이 농식품 및 바이오산업을 선도하고 있어 연구기능 집적화가 필요한 상황인만큼 전북도에 협의 절차도 없이 개편이 추진된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고자 함.

Ⅱ 추진결과

○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한 결과,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의 수도권 이전 계획 철회라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냄. 특히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이전계획의 부당성을 환기시키며 180만 도민의 입장을 견지하였음.

○ 아울러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여 이전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재이전 시 해당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및 행정기관의 장,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 이를 통해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함.

*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26.2.)

참 고 성명서 자료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의 수도권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보도된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를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정부 정책 기조를 거스르는 행위일 뿐 아니라, 전북도민과 농업·농촌을 지켜온 농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대한민국 농업 연구와 농업인 지원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 수도로 성장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진흥청 일부 기능을 수도권으로 되돌리려는 발상은 명백히 시대 역행적이며 퇴행적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합니다.

1.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의 수도권 이전 계획을 즉각 전면 철회할 것.
2. 농촌진흥청은 정부의 균형발전 국정 기조에 부합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

3. 정부는 “농생명 산업 수도 전북”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전북이 대한민국 미래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존립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수도권 집중은 반드시 완화되어야 하며, 그 길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데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80만 도민과 함께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의 수도권 이전 계획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8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2.5.2. 입장문 배포

개 요

○ 건 명 : 전북 금융중심지 반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 참여의원 : 서난이 위원장 등 특위위원 11명
○ 배 포 일 : 2026. 2. 25.(수)
○ 내 용 : 부산 박형준 시장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반대에 대한 전북도의회의 입장 발표

Ⅰ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박형준 부산시장이 전북 전주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26.2.)하면서, 해당 주장이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역행하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식 입장을 표명함.

○ 전북 금융중심지는 '서울, 종합금융 - 부산, 해양·파생금융 - 전북,기금·자산운용'으로 기능을 분담하는 상호보완적 구조로, 금융 기능의 전문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임을 강조하며, 특히 국민연금공단을 기반으로 한 기금운용 역량과 KB·신한 등 금융그룹 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의 금융중심지 입지 타당성을 제시함.

○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왜곡된 주장 중단과 국가균형발전 원칙 준수를 촉구하고, 정부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함. 아울러 지역 간 경쟁이 아닌 협력 기반의 금융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함.

Ⅱ 추진결과

○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공조 대응하여,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함. 이를 통해 지역 차원의 일관된 대응과 정책 메시지를 형성하고,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성과를 거둠.

○ 이러한 대응을 바탕으로 KB·신한 금융그룹에 이어 우리·하나 금융그룹 등 주요 금융지주가 추가로 전북 혁신도시에 인력과 조직을 확대 이전하며 금융거점화가 가속화됨. 나아가 글로벌 투자사들도 잇따라 진출을 확정하면서 전북의 자산운용 중심 금융생태계가 강화되고,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이 한층 제고됨.

참 고 **입장문 자료**

"전북 금융중심지 반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 기금운용 중심의 전북 금융중심지는 선택이 아닌 국가 전략이다 -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북 전주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대해 '국가 금융경쟁력을 갉아먹는 역행정책',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부산시장이 직접 중앙 정치권을 상대로 금융중심지 지정 반대를 공식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전반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이 국가 금융정책의 본질을 왜곡하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며,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주장임을 분명히 밝힌다.

전북이 추진하는 금융중심지는 부산과 경쟁하거나 기능을 빼앗는 모델이 아니다. 서울은 종합금융, 부산은 해양·파생금융, 전북은 기금·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중심지로 기능을 분담하는 구조는 '분산'이 아니라 **금융기능의 전문화를 통한 국가 금융경쟁력 '상생·확장' 전략**이다. 이를 '나눠먹기식 정책'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몰이해이자, 기존 거점의 기득권만을 앞세운 주장에 불과하다.

특히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전북은 기금운용 금융중심지 조성에 있어 가장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더해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의 금융타운·금융종합허브 조성 결정은 전북의 자산운용 생태계 확장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다. 이러한 여건을 외면한 채 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것은 지역 자산을 활용한 국가 금융 경쟁력 강화 기회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분명히 요구한다.

먼저, 박형준 부산시장은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을 두고 사실관계와 정책 취지를 왜곡하는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책임한 정치적 행태이다. 이제라도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운 공세를 거두고, 상호 보완과 역할 분담이라는 국가 금융정책의 대원칙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은 지역간의 갈등과 경쟁이 아닌, 서울·부산·전북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기능을 분담하고 상호 연계·협력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지역 상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상호 보완적 금융 거점으로의 성장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국가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에 부응하여, 국가 전체의 금융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조속히 결정하기를 바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전북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년 2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일동

2.6. 결의안 · 도정질문 · 5분 자유 발언

2.6.1. 결의안 –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개 요

○ 안 건 명 : 전북특별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정과제 반영 촉구 결의안

○ 발의의원 : 서난이 위원장, 정종복 부위원장, 국주영은(대표발의), 김동구, 이명연, 장연국, 한정수, 최형열 위원

○ 발 언 일 : 2025. 7. 25.(금)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Ⅰ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는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연기금 중심의 자산운용 금융생태계를 구축을 선도해왔으며,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함. 특히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었음에도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함.

○ 또한 전북은 금융기관 유치, 금융전문인력 양성, 금융혁신 공유오피스 및 핀테크 기반 구축 등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기반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으며, 연기금 중심 자산운용 금융을 통해 국가적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이에 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국정과제와 제7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법정 절차와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아울러 자산운용 공공기관 이전과 금융특화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서울·전북·부산을 잇는 균형 잡힌 금융 삼각축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참 고 결의안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정과제 반영 촉구 결의안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성공적인 이전을 계기로, 연기금 중심의 자산운용 금융생태계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 그리고 현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지속적인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되어 왔으며,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전북이 공식 명시되는 등 제도적·정책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속적인 공약과 도민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토교통부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관련 법 개정도 없이 고시하고 추진했던 반면, 전북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 재이전설이 나돌고, 금융위원장이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고 발언하는 등 공약의 진정성과 이행 의지를 의심케 하는 상황만 계속되어 왔습니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산운용 중심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준비를 이미 실질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한 금융기관 유치 16개사,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 금융혁신 공유오피스 등 금융 인프라 확충, 금융전문인력 연간 340명 양성 체계 구축, 전북특별법상 5대 금융산업 육성 특례 제도 마련, 핀테크 벤처 육성, 금융빅데이터센터 및 디노랩 개소 등 혁신 생태계 구축, 그리고 자산운용·기후에너지·스마트농생명 3대 특화 전략을 담은 '금융허브 마스터플랜' 수립에 이르기까지 전북은 명실상부한 제3금융중심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입니다.

특히,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단지 지역 요구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산업 질적 전환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전북이 특화하고 있는 자산운용 금융은 국내 금융중심지 가운데 유일하게 1,300조 원 규모의 연기금 운용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금융중심지 지정 시 연간 1.3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산업적·정책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단순한 대통령 공약의 수준을 넘어 '국정과제'로 명확히 반영하고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대통령 공약을 즉각 이행하고, 이를 국가의 국정과제에 명시하여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금융위원회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및 제7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반영,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심의 등 관련 법정 절차를 조속히 착수하고, 연내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기금운용과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자산운용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 계획을 마련하고, 금융특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간 격차 해소, 그리고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과제는 균형 잡힌 금융 삼각축(서울-전북-부산)의 완성입니다.

국민과 도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진정한 책무이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그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025. 7. 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2.6.2. 도정질문 -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개 요

○ 안 건 명 :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 발언의원 : 정종복 부위원장

○ 발 언 일 : 2025. 6. 11.(수)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Ⅰ 주요내용

○ 전북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하여 '전북 이전 당위성 논리발굴', '이전 공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방안' 등 연구용역을 통해 중점 유치기관 발굴 및 이전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지난 '23년 3월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발족하고 7개 분야, 55개 중점 유치 대상기관에 대한 실국별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총 5차례 유치활동 결과보고 및 후속 점검회의 자료를 기반으로 파악했을 때, 전북의 중점유치 대상 기관 대부분은 지방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있는 것으로 보임. 노조 반발, 인력 이탈 등으로 지방이전에 반발이 예상되고, 이전 대상이 아니어서 이전 자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가장 최근의 자료에서는 대부분의 기관이 '부정' 또는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며 긍정적 의견은 한두개 기관에 불과함. 특히, 전북의 핵심 유치 대상으로 분류되는 금융, 농생명 분야 기관의 경우 단 한 곳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지 않음.

○ 현재의 유치방식과 전략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과 분위기 전환이 필요함. 기관의 성격에 따른 유치활동 다양화 방안을 제안함.

○ 기존과 같은 설립 목적상의 분류뿐만 아니라 민간-공공, 정관 개정-법률 개정 전제, 본사 이전-산하기관 이전 등 이전 성격에 따른 분류를 통한 접근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전북으로 이전할 결심을 이끌어낼 매력적인 유인책을 발굴해야함. 기존의 용역보고서에서 언급된 전북유치 전략은 금융산업 지원 전담기구 설치, 전북국제금융센터 입주혜택 제공, 지역채용 의무화 요건 완화와 같은 지원책인데, 현재 전북국제금융센터의 경우 착공조차 하지 않았고 지역채용 의무화 요건 완화처럼 상위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자칫 허황됐다는 느낌을 줄 위험도 있기에 전북의 이행력을 보증할 수 없는 지원책은 과감히 제외하고 다른 전략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함. 농협과 마사회 등 전북이 핵심목표로 하는 기관 대부분은 타 시도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종 특례 제공과 기회발전특구 활용 등 전북의 강점이 담겨 있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임.

○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미래성장동력과도 직결되어 있어 시군간의 경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내부적인 갈등은 악재가 될 우려가 있어 정책의 본격 추진에 앞서 갈등을 종결해야함.
한국마사회의 유치에 대한 시군간 갈등 해소를 비롯하여 이전 부지, 기존 혁신도시 이전 검토 및 새로운 혁신도시 조성에 대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함.

2.6.3. 5분 자유발언

가. 대광법 개정 관련

개 요

○ 안 건 명 : 전북광역교통망 확충 끝이 아닌 시작, 사활걸어야
○ 발언의원 : 최형열 위원
○ 발 언 일 : 2025. 10. 20.(월)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Ⅰ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교통 오지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9년 7월부터 추진해 온 대광법 개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으나, 끈질긴 노력과 연대·공조를 통해 올해 4월 22일 비광역시 최초 국가광역교통망 편입이라는 성과를 이루었고,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확정되며 전북은 법과 제도로 단일 광역권으로 인정받게 되었음.

○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가 아니라 교통·산업·문화·생활권이 연결되는 획기적 변화로, 전북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이에 따라 전북도는 광역도로·광역철도 등 15개 사업, 총사업비 2조 1,916억원 규모의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도민이 체감할 교통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국가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등 남은 절차가 많은 만큼 과거 지지부진했던 사업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함. 전북 교통의 판을 바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전북도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함. 총사업비 중 약 1조 1천억원에 달하는 지방비 확보를 위해 중복·불필요 사업을 정비하고 현실적인 재원 조달계획을 신속히 마련해야 하며,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한 재원 분담 비율을 설정해야할 것임. 전북 교통소외 해소는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전북도는 사즉생의 각오로 실질적인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드림.

나. 전북 1특의 새로운 발전전략 제안 관련

개 요

○ 안 건 명 : 전북 1특의 새로운 발전전략, 전북-세종 초광역초단축 30분 교통망 제안
○ 발언의원 : 서난이 위원장
○ 발 언 일 : 2026. 2. 6.(금)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Ⅰ 주요내용

○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초광역권 중심의 정책 전환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타 시도는 통합과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대규모 국가 지원과 성장 기반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의 독자노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확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함. 이에 전북 1특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수도 중심지로 부상하는 세종을 겨냥한 '전북~세종 단일 권역 30분 교통망' 구축을 제안하고,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충청권 광역교통망 CTX 구축, 한반도 KTX 구상 등 변화하는 국가 교통·행정 체계 속에서 전북이 세종과의 생활·경제권 연결을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전주권 광역철도망 구축과 동산역 등 멈춰진 역사 활성화를 통해 전북 내부 교통망을 확충하고, 세종과 전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교통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을 기반으로 KB·신한금융 등 금융기관의 금융타운 조성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금융기관 집적화를 통해 전북 혁신도시를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육성하고 금융중심지 지정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함. 특히 세종의 행정·입법 기능과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 기능을 연계하여 서울 여의도의 기능을 지방화하는 '초광역 금융·행정·입법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5극3특 수정계획 등 구속력있는 국가계획에 전북만의 전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제3장

주요 활동 결과

3.1. 특위활동 성과 91

3.2. 특위활동의 아쉬운점 96

3.3. 정책제언 97

3.4. 맺음말 100

제3장 주요 활동 결과

3.1. 특위활동 성과

3.1.1. 업무 현황 점검을 통한 균형발전 정책 방향성 제시

□ 업무보고와 수시 간담회, 업무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사전에 조율하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 제시 및 성과 제고에 기여함.

○ **(1차 업무보고)** 정부의 ①**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도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에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적하고, 농생명 수도로서 농식품부 이전을 요구하는 등 선제적 노력을 당부함. ②**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이 대광법 개정안 및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③**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위해 국정과제 반영 및 금융위 권고사항 이행 등 차질 없는 준비를 요구함.

○ **(2차 업무보고)** ①**정부의 5극3특 초광역권 균형발전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성장엔진 선정,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철저한 사전 대응을 요구함.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보와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②**전북특별법 개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4개 '특별자치시도' 및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협업·공조 등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함. 또한, 국토부의 ③**2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에 대응하여 도의 관련 용역 추진 현황과 대응 경과를 보고받고, 지속적 노력을 촉구함.

3.1.2. 변화된 정부 정책에 선제적 대응 및 전략 마련 촉구

□ '25.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방균형발전 기조가 '5극3특' 초광역권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정부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도 균형발전 정책의 선제적·맞춤형 대응 필요성이 증대됨.

○ 이에 따라 농생명, 피지컬 AI, 새만금 등 전북의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분야별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 여건과 성장 잠재력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선정할 것을 촉구함. 또한 국가 정책과 연계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함.

○ 아울러 초광역권 중심의 정책 추진 기조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계획에 따른 차질없는 이행을 요구하였으며, 신규 특례 발굴 및 핵심산업 중심의 전북특별법 개정의 조속 추진을 촉구함. 이를 통해 규제 완화, 권한 이양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국책사업 유치, 기업 투자 확대 및 재정지원 확보를 위한 실질적 여건 조성을 강조함.

○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기관별 기능과 입지 수요를 분석하고, 전북의 정주여건·산업 인프라·행정 지원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전략적 유치 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보고를 요구함. 아울러 '26. 4월 출범한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참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 유치 당위성 확보와 도민 공감대 확산에 일조함.

3.1.3. 현안 대응을 위한 도민 의견 결집 및 지역 경쟁력 강화

□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의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대응하였으며, 특히 타운홀 미팅에 앞서 도내 균형발전 주요 현안을 점검·공유하며 공조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등 전북의 지역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의 수원 재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도의회-전북도 공조하여 부처 및 기관에 대응하고 재이전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하는 등 도민 의견을 대변함으로써 수도권 재이전 계획 철회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둠.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재확인하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취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 핵심 공공기관의 기능 유지 및 지역경제 안정성 확보에 기여함.

○ 또한, 부산시장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반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부당성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적극 피력함으로써 지역 간 경쟁 구도 속에서 전북의 정책 논리를 강화함. 아울러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과정에서 국내 금융지주와 투자기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거점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냄.

3.2. 특위활동의 아쉬운점

□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의 경제와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분야로서 다부처·다분야에 걸쳐 추진되는 특성이 있으며,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구조로 인해 지방정부 및 의회의 실질적 영향력 확보에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함. 이에 따라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대응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행계획, 금융중심지 지정 등 주요 균형발전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방 차원의 선제적 전략 마련과 시군 지원방안 발굴 등 다양한 정책 검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

○ 또한, 정권 변화에 따라 글로컬대학, RISE 등 대학지원 사업과 기회발전특구 등 주요 정책의 방향이 조정되거나 유사 정책이 병행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업 및 지자체 현장에서는 정책 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중장기 정책 방향 제시 측면에서 보완의 여지가 있었음.

○ 아울러, 도 차원의 전담 대응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내 균형발전팀을 중심으로 정부 및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 부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전북 균형발전특위를 비롯한 도의회의 조직 확대 요구가 지속되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이전, 산업·교육·교통 등 광범위한 정책 영역을 포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직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이 있음.

3.3. 정 책 제 언

3.3.1. 균형발전 전담 조직 확충 및 상시 대응체계 구축

○ 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 금융, 산업, 교육, 규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국가 정책 기조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상시 대응 조직이 필수적임.

○ 특히,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추진 기반이 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6.5.7.)함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 강화, 균형발전영향평가 및 초광역특별협약 도입,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등 주요 균형발전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른 향후 초광역권 중심의 정책·재정 지원 확대와 정부 대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정부는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범정부 추진협의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범부처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도성장을 총괄해나갈 예정인만큼 도에서도 그에 대응하는 전담 채널과 조직 체계 구축이 요구됨.

○ 이에 전북도에서도 국단위 이상의 균형발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정책 기획·대응·성과 관리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3.3.2.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 확보

○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초광역권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 및 국토 대전환 정책 기조가 본격화됨에 따라, '3특'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독자적인 정책 수혜 주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은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메가특구 도입, 지역인재 육성, 지방우대 체계, 균형성장 거점 육성 등을 주요 축으로한 초광역권협력사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재정 및 정책지원이 초광역권 중심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는 현 시점에서 전북이 초광역권의 주변부로 머무르거나 수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됨.

○ 또한, 정부에서는 현대차그룹의 로봇·수소·AI 분야 약 9조원 규모 투자 추진을 지방주도성장의 시금석으로 보고 있는 만큼, 전북도 역시 새만금, 농생명, 피지컬 AI, 재생에너지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성장엔진을 구체화하고, 국가 정책과 연계한 전략사업 발굴 및 제도 개선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3.4.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및 자치권 실질화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실질적인 재정·조직 등 자치권 확대나 산업기반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재정비해야 할 것임.

○ 피지컬 AI, 새만금, 재생에너지, 농생명 등 전북의 미래산업과 연계한 신규 특례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을 지속 검토해야 함. 부처 수용성 확대를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 공조를 제도화하고, 규제 완화·권한 이양 등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와 재정지원 확보의 실질적 여건 조성이 필요함.

3.3.4.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실행력 강화 및 지역상생 기반 마련

○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26년 연내 추진으로 확실시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의 단편적 대응을 넘어 전략적·체계적 유치 활동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 전담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별 기능·입지 수요 분석을 토대로 전북의 정주여건·산업 인프라·지원체계 등 전북의 강점을 반영한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특히 농생명·금융분야 핵심 유치 대상 기관에 역량을 집중하고, 피지컬 AI, 새만금 관련 공공기관 등 새로운 전략산업 연계 기관의 유치를 검토해야 할 것임. 정치권 및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도민 공감대 확산과 대외 경쟁력을 제고해야함.

○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순 유치활동이 아닌, 이전 기관 종사자 정착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산업연계 지원 등 유치 이후 단계까지 고려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구성원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이전 효과의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또한, 기존 혁신도시 이전 시 아쉬움으로 남았던 지역인재채용 등 지역상생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임.

3.4. 맺 음 말

○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정부 균형발전 정책 전반에서의 상대적 배제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속에서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25년 6월 12일 구성되어 2026년 6월 11일까지 1년여의 활동을 추진하였음.

○ 정권교체와 함께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서도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전북의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음.

○ 특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방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재편되며 산업을 비롯한 R&D, 인재양성, 국토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균형발전의 틀 안에서 확대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균형발전 정책은 특정 분야를 넘어 도정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균형발전 정책 전반의 논의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이제는 그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도의회 전체가 균형발전 과제를 공유하고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데 일조하고자 함.

○ 특위의 활동은 종료되지만,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모든 의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전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책무를 함께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임.

제4장

부 록

4.1. 전북특별자치도 업무보고 자료 103

4.2. 간담회 자료 131

4.3. 주요 일간지 보도내용 143

4.1. 전북특별자치도 업무보고

Ⅰ. 1차 업무보고 ····· 105

Ⅱ. 2차 업무보고 ····· 114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1차 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건설교통국, 기업유치지원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목 차

〈기획조정실〉

1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 상황

2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 정책 추진

〈건설교통국〉

3 「대광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 상황

〈기업유치지원실〉

4 기회발전특구 추진 관련

5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 상황

〈특별자치교육협력국〉

6 전북특별자치도 위상강화 방안 마련(5극3특)

7 '서울대 10개 만들기' 준비 관련

1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 상황

균형발전팀장	정책기획관
김대한 (2225)	이현서 (2110)

□ 정부동향

○ 유치경쟁, 입지 등 **지역간 갈등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전 기본계획 방향성**을 제시할 **연구용역* 추진중**(국토교통부)

*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23.11.~'25.10., 국토연구원)

□ 추진방향

◈ 연구용역(~'23.6월)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비전'** 및 **'지역·산업·경제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이전'**을 고려한 **55개 중점 유치 기관 선정하여 중점유치 추진**

○ **(농생명산업 고도화) 농생명 관련** 1차 이전기관 및 관련 기업과 **시너지 효과**로 **농생명 산업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6개 기관**

-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 **(자산운용 금융도시 조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19개 기관**

-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 7대 공제회***, 우체국금융개발원 등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 **(지역강점과 연계)** 미래 전략 산업 및 전통문화 등 **30개 기관**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 추진상황

○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구성 및 유치 활동(5회) : '23. 3월~

○ 공공기관* 전북 이전을 위한 국회의원 공동성명서 결의 : '23. 3월

*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

○ 공공기관 전북이전 당위성 논리발굴 연구용역 : '23. 6월

○ 이전공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방안 연구용역 : '24. 5월

○ 공공기관 소재지 개정을 위한 입법 건의 활동 : '24. 9월~

○ 메가비전 프로젝트* 반영 추진 : '25. 2월~

*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형프로젝트 발굴·추진으로 전북 신성장 기반 구축

○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중앙부처, 지방시대위원회 등 건의 활동 : '25. 4월~

□ 금후계획

○ 정부동향 파악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대응 : 연중

균형발전팀장	정책기획관
김대한 (2225)	이현서 (2110)

2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 정책 추진

□ 사업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6개 시군 지원을 위한 동부권 발전 사업 및 **도내 전시군 대상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으로 **도내 균형발전 도모**

□ 추진현황

○ **동부권 6개 시군 대상 동부권발전사업 추진 중**

- (지원근거)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 조례」
- (주요내용) 동부권특별회계 설치, 동부권 6개시군 균등예산 지원
- (지원규모) ①'11~'20년 연 300억(시군당 50억), ②'21~'25년 연 360억(시군당 60억)
- (연구용역) **제3차 동부권발전계획**('26~'30) **수립 중**('25.3~'25.11)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25.6.25. 도의회 의결)

주요항목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지원지역 선정 (제4조)	. 5년마다 전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수준을 조사·분석하여 지원지역 선정
균형발전 계획수립 (제5조~제7조)	. 기본계획(5조) : 지역 특성에 맞는 5년 단위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7조)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제9조~제13조)	. 구성 : 위원장(행정부지사)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 . 심의·의결사항 : 지원지역 선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균형발전 특별회계 (제15조~제16조)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운용** 가능(존속기한 : 5년) . 세입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세출 : 균형발전사업 사업비 지원 등
시행시점 (부칙)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서남권역**에 대한 지원은 서남권역 개발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지원하고 **2028년까지 일반회계로 지원**

□ 향후계획

○ 조례 부칙에 따른 서권역 개발 연구용역 추진 : '26. 1월~

물류팀장	교통정책과장
안조혁 (3592)	김정중 (3650)

3 「대광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 상황

□ 법률개정(공포일 4.22 / 시행일 10.23.)

○ (개정내용)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중심으로 **대도시권 범위 확대 규정** 및 광역교통시설의 요건을 변경하여 **국고 지원근거** 마련

□ 추진상황

○ (국 토 부) 시행령 개정 및 **대도시권 국가계획 수립**

- **(시행령 개정)** 제2조(적용범위) [별표1] 대도시권 범위* 개정(~'25.10.)
  * (전주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및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 **(국가계획 수립)**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 변경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한국교통연구원, '24.6.~)
  * 시도 수요조사('25.8.), 기재부 협의를 거쳐 **'26년초 확정·고시** 예정

연구용역 착수	지자체 수요조사	관계기관 협의	시행계획(안) 마련	공청회	위원회 심의	확정 고시
한국교통연구원 ('24년~)	⇨ 사도 수요조사 (~'25.8월)	⇨ 기재부 협의 (사업 조정)	⇨ 대광위 한국교통연구원	⇨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 광역교통 위원회	⇨ 대광위 ('26.上)

○ (우 리 도) 시군 수요조사를 통한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전략사업 발굴** 및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 추진

- **(대응체계 마련) 광역교통 협의체* 운영**(1차, 5.9.) 및 **국토부 간담회**(2차, 6.2./7.10.)를 통한 전주권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확충을 위한 **건의사업 논의·검토**
  * 道,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전북연구원, 전주시정연구원 등
- **(연구용역 추진)**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방향 제시 및 **광역교통시설 사업 발굴**과 **사업별 타당성 등 논리 개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국토연구원), 300백만원, '25.6.~'26.6.

※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추진("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지방 대도시권 성장 견인")

□ 금후계획

○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수요조사 제출**(道→국토부) : '25. 8.

○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확정·고시(국토부) : '26. 上

기업유치팀장	기업유치과장
박선애 (3545)	양선화 (2401)

4 기회발전특구 추진 관련

□ 기회발전특구 개요

○ **(개 요)**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광역 지자체가 총량(道 200만평, 市 150만평)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신청하면 산업부에서 지정

○ **(인센티브)** 세금감면(법인세, 취득세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지원(5~10%p), 규제특례 등

□ 지정 및 신청현황

○ **(지정현황)** '24. 6월 1차 지정 후 '25. 3월 2차 지정 신청

- **(1차 지정)** 3개 분야, 4개 시(전주, 익산, 정읍, 김제), 7개 산단, 88만평
  ※ **(전주)** 탄소융복합 29만평 / **(익산)** 바이오 15만평 / **(정읍)** 바이오 7만평 / **(김제)** 모빌리티 37만평
- **(2차 신청)** 2개 분야, 3개 시군(익산, 남원, 고창), 3개 산단, 36만평
  ※ **(익산)** 소재부품 7만평 / **(남원)** 라이프케어 16만평 / **(고창)** 소재부품 13만평

□ 추진상황

○ 2차 지정 신청안 전북 지방시대위 의결 : '25. 3. 17.

○ 지정 계획서 제출(道 → 산업부) : '25. 3. 25.

○ 지정 신청 부지 현장실사(산업부 등) : '25. 4. 7.

○ 산업부 실무위원회 및 지방시대위 분과위 심의 : '25. 7월초

□ 금후계획

○ 지방시대위 전체회의 의결 : '25. 7월말

○ 2025년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시 : '25. 8월초

○ 기회발전특구 잔여면적(76만평)신청 : '26년~

5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 상황

금융산업팀장	금융사회적경제과장
최낙구 (4586)	신미애 (3280)

<이재명 대통령 공약('25.5월)>

(전북공약) "청년이 모이는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후보자 발언) "전주를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제3 금융중심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 추진상황('19년 이후~)

○ 국민연금공단 본사 **이전**('15년), 기금운용본부 이전('17년)

○ 문재인·윤석열정부 공약 반영('17/'22년) 및 금융중심지 지정 권고사항 이행(금융위, '19~)

구 분	이행 상황
❶ 인프라 개선	①**전북금융센터 건립**('27년 완공), ②국민연금공단 글로벌기금관 준공('21.4월), ③전북테크비즈센터 준공('21.5월) ④**국내외 금융기관 16개사 유치**(BNY, SSBT 등)
❷ 금융모델 구체화	①**'전북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모델' 방향 설정** ('19년 연구용역) ②**'특화 금융모델 실행과제' 발굴** (자산운용·기후에너지·스마트농생명 / '24년 연구용역)
❸ 이행계획 제시 및 성과	① **(전문인력 양성)** 기금운용 전문인력 130명, 지역대학 백오피스인력 210명 ② **(금융혁신 생태계)** 핀테크기업 양성('19~), 금융 빅데이터센터 구축('22~), 금융혁신 공유오피스 조성('23~) ③ **(금융역량 강화)** 도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실용금융교육 추진('25년~)

○ 「전북특별법」에 **금융산업육성 특례** 반영·**실행화**(5개 분야)

- 금융기관 유치지원, 전문인력양성, 도민금융교육, 핀테크 육성, 간접투자 활성화

○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을 위한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추진**

- 자문·논의(1~3월), 전북연 현안과제 선정 및 계획 수립(3~7월)

※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4조)

: 개발계획 수립 제출(시도지사) → 지정 심의(정부금융중심지추진위)→ 지정 고시(금융위)

□ 금후계획

○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제출**(도→금융위) : '25. 하반기

- 공고 및 의견수렴 → 의회보고 → 도시계획 심의 → 금융위 협의·제출

○ '금융특화도시' 국정과제 반영 건의 활동(부처·국정기획위·정치권) : 지속

○ 금융공공기관(한국투자공사, 공제회 등) 유치 활동 전개 : 연중

6 전북특별자치도 위상강화 방안 마련

특별자치도기획팀장	총괄지원과장
이윤정 (2906)	이수행 (2730)

< 정책 공약 >

(성장 정책과제4. 국가균형발전)

‣ 5극, 3특* 구현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달성하겠습니다.(공약집 182p)

-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 추진

* (5대 초광역권)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개 특별자치도) 제주·강원·전북

□ 필 요 성

○ **(자치권한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4.1.18.),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24.12.27.)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자치권 확보**

- 전북에 적합한 특례를 발굴·활용하고 있으나 재정 특례(지방교부세, 세액감면 등) 등 핵심 특례 미반영으로 **고도의 자치권 확보에 한계**

□ 주요 내용

○ **(균형발전)** 국가보조금 차등 보조율 현실화, 보통교부세 교부율 특별자치도 우대 및 기준인건비 현실화 등으로 **재정 및 자치권 강화**

○ **(특례반영)**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입법개정 지원**과 지역별 비전에 부합하는 특례는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수용 여건 조성**

* (전북) 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2차 개정, (강원) 규제혁신 중심 3차 개정, (제주) 자치시 설치

□ 추진 상황

○ **(국정기획위)**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건의 활동 추진**

- 국정기획위 정치행정 분과장 전북법 통과 건의(7.7., 이해식 의원실, 박광운 보좌관)

○ **(균형특위)** 간담회(7.7.) 안건(균형성장 전략과제*) 제출 및 질의사항 대응

* 특별자치도 자율성 강화 및 5극 3특 초광역 협력 체계 구축(각종 특례 반영, 자치권한 확대)

○ **(관계 부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건의 활동**(6.12.~)

-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제도과장 면담 등(4회)
- 국조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부단장, 전북지원과장 등 면담(2회)

□ 금후 계획

○ 국정과제 확정 시(7월말 예정)까지 지속 대응 : '25.7월~

7 서울대 10개 만들기 준비 관련

대학협력팀장	교육협력과장
김도연 (4596)	김호식 (2810)

□ 추진배경

○ **(지역균형발전)** 학생·교수·연구비의 서울·수도권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고등교육·연구인프라를 조성하여 교육 불균형 완화

* 학생1인당 교육비 : (서울대) 6,000만원, (지역거점대학) 2,500만원

○ **(글로벌 경쟁력 제고)** 미국 UC, 독일 엘리트 대학처럼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전국적 육성 필요

□ 주요내용

○ **서울대 수준의 거점형 국립대 10개 육성**

-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70%)까지 단계적으로 집중 투자
-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어학프로그램 및 해외유학 지원 확대

○ **교육경쟁력 제고 및 강력한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취업 연계형 소단위 전공 의무화
- 학과·전공별 기초역량 교육 프로그램 도입, 장학금·생활비 지원 확대

○ **세계적 연구대학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

- 세계 최고 교수진 유치 및 대학-국가·민간 연구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 대학원 장학제도 개선 및 연구·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 금후계획

○ **전북대 특화분야와 지역산업을 연계한 고등교육 발전전략 마련**

- 전북대가 강점을 보유한 농생명, 탄소소재, 에너지·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되는 연구개발 및 고급 인력(석·박사급) 양성사업을 발굴·지원

○ **도내 대학 전체의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도모**

- 전북대 외에도, 도내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구조 마련
- 글로컬대학, RISE 과제와 연계해 지역특성화 과제 발굴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2 차 업 무 보 고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건설교통국, 기업유치지원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목 차

〈기획조정실〉

1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 상황

2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 정책 추진

3 5극3특 관련, 전북도의 전략 방안

〈건설교통국〉

4 「대광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 상황

〈기업유치지원실〉

5 기회발전특구 추진 관련

6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 상황

〈특별자치교육협력국〉

7 5극3특 관련, 「전북특별법」 개정 추진 상황

8 '서울대 10개 만들기' 준비 관련

1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 상황

균형발전팀장	정책기획관
김대한 (2225)	이현서 (2110)

□ 정부동향

○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국정과제* 반영 등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국정과제)** 51.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김윤덕 장관 취임사)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미 시기가 늦은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25.7.31.)

(중앙지방협력회의 대통령 발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25.11.12.)

- **(정부로드맵) 정부 123대 국정과제('25.9.),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25.9.30.) 등 공공기관 이전 관련 연차별 계획 공표**

▪ **('25년 연내)**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 및 추진체계 구축
▪ **('26년)** 연구용역 및 공론화를 거쳐 공공기관 이전 원칙, 일정 등 로드맵 수립
▪ **('27년)** 청사 임차, 공동청사 건설 등 신속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이전기관 종사자 조기 정착을 위한 교통·교육·의료·정주 패키지 지원, 연구개발 캠퍼스·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혁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

○ **(국토부 동향)** 혁신도시 성과평가 관련 연구용역*과 별개로 **기관 전수조사 등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 추진**('25.11./ 국토연구원)**

*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 용역('23.11.~'25.10., 국토연구원)** :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2차 이전 대비 지역간 갈등관리를 주 내용으로 종결, **비공개**

< **2차 이전 관련 연구용역 개요 및 주요내용 >

▪ **(용 역 명)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
▪ **(주요내용)**
① 이전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 지원 및 분석
② 지역별 전략산업, 산업구조, 낙후도 등 분석
③ 旣 실시된 성과평가 등을 기반으로 지역산업과 연계, 신속한 이전방안 등 실행전략 제시
④ 공공기관 관련 실행지원 조직 구성·운영
⑤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대응, 전문가 자문 등 제반업무 지원

□ 추진방향

◈ 연구용역(~'23.6월)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비전**' 및 '**지역·산업·경제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이전**'을 고려한 **55개 중점 유치 기관 선정하여 중점유치 추진**

○ **(농생명산업 고도화) 농생명 관련** 1차 이전기관 및 관련 기업과 **시너지 효과로 농생명 산업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6개 기관**

-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 **(자산운용 금융도시 조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19개 기관**

-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 7대 공제회***, 우체국금융개발원 등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 **(지역강점과 연계)** 미래 전략 산업 및 전통문화 등 **30개 기관**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 추진상황

○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구성 및 유치 활동(6회) : '23. 3월~

※ 추진단 공식적 중점유치 활동 외에 **부서별 유치 활동 상시 전개**(금융중심지, 한국마사회 유치 등)

○ 공공기관* 전북 이전을 위한 국회의원 공동성명서 결의 : '23. 3월

*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

○ 공공기관 전북이전 당위성 논리발굴 연구용역 : '23. 6월

○ 이전공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방안 연구용역 : '24. 5월

○ 공공기관 소재지 개정을 위한 입법 건의 활동 : '24. 9월~

○ 메가비전 프로젝트* 반영 추진 : '25. 2월~

*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형프로젝트 발굴·추진으로 전북 신성장 기반 구축

○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중앙부처, 지방시대위원회 등 건의 활동 : '25. 4월~

○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 운영 확대 및 대외 홍보 활성화 : '25. 9월~

□ 금후계획

○ 정부동향 파악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대응 : 연중

○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북 대응전략 고도화 방안(전북연구원) : '25. 11월~

○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점 유치활동 전개 : '25. 12월~

균형발전팀장	정책기획관
김대한 (2225)	이현서 (2110)

2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 정책 추진

□ 사업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6개 시군 지원을 위한 동부권 발전 사업 및 **도내 전시군 대상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으로 **도내 균형발전 도모**

□ 추진현황

○ **동부권 6개 시군 대상 동부권발전사업 추진 중**

- **(지원근거)**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 조례」
- **(주요내용)** 동부권특별회계 설치, 동부권 6개 시군 균등예산 지원
- **(지원내역)** ① '11~'20년 연 300억(시군당 50억) ② '21~'25년 연 360억(시군당 60억)
- **(제4단계 동부권발전계획**'26~'30 **수립)**

① 지원분야 : 3+1체계(농식품, 관광,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 연계협력)
② 사업범위 : 사업별 50억원 이상, 시군별 총사업개수 4개 이내
③ 예산내역 : 총 360억, 시군당 56억, 인센티브 12억, 연계협력 12억
④ 사업목록 : 총 24개(관광 12, 식품 7, 기금연계 3, 연계협력 2)
* (시군별 사업) 남원 4, 진안 3, 무주 3, 장수 4, 임실 4, 순창 4, 연계협력 2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25.7월)

- **(주요내용)** 전시군 중 지원지역을 선정, 특별회계 설치, 균형발전사업추진
- **(조례부칙)** 2026. 1.1.부터 시행. 서남권역에 대한 지원은 서남권역 개발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지원하고 2028년까지 일반회계로 지원
- **(추진사항)** 서남권역 개발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균형발전사업 추진

* 도종합계획상 **서남권**(정읍, 고창, 부안)과 **실무자 간담회** 개최('25.10.23.)
· 내용 : 균형발전 조례 제정 현황 설명 및 서남권역 개발 지원 관련 시군 의견 수렴

□ 금후계획

○ 서남권역 개발 연구용역 등 균형발전사업 추진 : '26. 1월~

참고 1 균형발전 지원 조례 및 서남권역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주요항목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지원지역 선정 (제4조)	. 5년마다 전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수준을 조사·분석하여 지원지역 선정
균형발전 계획수립 (제5조~제7조)	. 기본계획(제5조) : 지역 특성에 맞는 5년 단위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제7조)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제9조~제13조)	. 구성 : 위원장(행정부지사)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 . 심의·의결사항 : 지원지역 선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균형발전 특별회계 (제15조~제16조)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운용** 가능(존속기한 : 5년) . 세입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세출 : 균형발전사업 사업비 지원 등
시행시점 (부칙)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서남권역**에 대한 지원은 서남권역 개발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지원하고 **2028년까지 일반회계로 지원**

□ 도종합계획('26~'40) 상 서남권 : 정읍, 고창, 부안

- 5개 권역 구분 및 권역별 특화발전 방향(**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p12)
  - 중추도시권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융복합소재, 생명산업, 전통문화
  - **서남권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바이오산업, 해양역사문화
  - 동북권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산림치유, 고부가식품
  - 동남권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생태거점, 헬스케어산업
  - 새만금권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 미래신산업, 글로벌SOC

참고 2 동부권 발전사업안

○ 총 24개 사업 [관광 12, 식품 7, 기금연계 3, 시군 연계협력 2]

(단위 : 백만원)

시군	분야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비고
				총사업비	특별회계	시군비	
		24개 사업	합계	226,930	104,400	122,530	
남원 (4)			소계	26,300	16,800	9,500	
	관광	함파우 예술체험촌	'26~'30	10,500	6,800	3,700	
		승월교 리모델링	'26~'30	5,800	3,300	2,500	
	식품	특화작목 상품화 통합모델 구축	'26~'30	5,000	3,350	1,650	
		추어식품클러스터	'26~'30	5,000	3,350	1,650	
진안 (3)			소계	37,330	16,800	20,530	
	관광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활성화	'26~'30	5,000	2,250	2,750	
	식품	홍삼한방클러스터 고도화	'26~'30	12,500	5,625	6,875	
	기금연계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26~'30	19,830	8,925	10,905	
무주 (3)			소계	38,900	16,800	22,100	
	관광	무주 반디누리 생태체험공원	'26~'30	19,800	6,297	13,502	
	식품	무주 천마글로벌 허브 산업화 구축사업	'26~'30	5,000	1,920	3,080	
	기금연계	무주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26~'30	14,100	8,583	5,517	
장수 (4)			소계	38,800	16,800	22,000	
	관광	장수누리랜드관광중심거점 조성	'26~'30	8,700	4,800	3,900	
		장수 트레일빌리지 조성	'26~'30	5,000	1,300	3,700	
	식품	레드푸드 직구마켓 조성	'26~'30	6,400	3,300	3,100	
	기금연계	장수나래 소규모 공공임대 주택	'26~'30	18,700	7,400	11,300	
임실 (4)			소계	47,360	16,800	30,560	
	관광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	'26~'30	13,420	6,710	6,710	
		세계명견 명소화사업	'26~'30	12,000	1,800	10,200	
		옥정호 생태탐방로 순환체계 구축	'26~'30	15,000	5,386	9,614	
	식품	임실치즈식품 클러스터 육성	'26~'30	6,940	2,904	4,036	
순창 (4)			소계	33,560	16,800	16,760	
	관광	쉴랜드 치유관광지 거점화 사업	'26~'30	5,500	2,625	2,875	
		순창 맑은숨 휴(休)마루 조성사업	'26~'30	10,760	6,090	4,670	
		강천산군립공원 웰컴브리지	'26~'30	5,000	2,325	2,675	
	식품	발효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 클러스터 육성	'26~'30	12,800	5,760	7,040	
			소계	4,680	3,600	1,080	
임순진남	연계협력	동부권 그린바이오 미생물소재 실증 지원	'26~'28	2,964	2,280	684	
무진장		무진장 식품사업화 대응 이동장터 운영	'27~'30	1,716	1,320	396	

균형발전팀장	정책기획관
김대한 (2225)	이현서 (2110)

3 5극3특 관련, 전북도의 전략 방안

□ 정부동향

○ 이재명 대통령 공약 '5극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 제시 및 123대 국정과제 반영*

* (국정과제) 49.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등 산업, 교육, 행정·재정분야 전반

○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의결('25.9.30.)

* 5극3특 경제권, 생활권, 행정·재정 기반구축 등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

➡ **(추진현황) 설계도 관련 부처 방침 등 미확정, 현재 부처 이행계획 수립중**

□ 주요정책 및 대응현황

① 경제권 지역 전략산업 '성장엔진' 육성

- (개요) 중앙-지방 협력으로 권역단위의 성장엔진을 선정하여 초광역특별협약을 통한 범부처 성장 5종세트(인재양성,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
- (현황) 도 전략산업을 발굴·제출*하였으며, 산업부-지방위-도 간담회를 통해 초광역권간 중복여부 및 세부분야 등 조정·협의중

* 제출산업(안) : 신재생에너지, 첨단 AI모빌리티, 바이오

② 생활권 특화성장 지원 및 거점도시 조성

- (개요) 3특 특화성장 지원, 2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거점도시 조성 및 중소도시 성장 지원
- (현황) 공공기관 유치 논리 고도화 및 추진단 운영, 국토부 현안건의 등

③ 추진기반 3특 행정·재정권한 강화

- (개요) 지역중심 맞춤형 권한이양을 위해 수요에 대응하는 권한·특례 부여
- (현황) 신규 특례 발굴 및 5대 핵심산업* 중심의 전북특별법 일부 개정 추진 등

* (5대 핵심산업 분야)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 금후계획

○ 5극3특 분야(부처)별 동향파악 및 우리도 현안사업 반영 건의 : 상시

물류팀장	교통정책과장
안조혁 (3592)	김정중 (3650)

4 「대광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 상황

□ 정부동향

○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에서 **수도권 중심의 투자 구조를 개선**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해 **비수도권 비중을 적극 확대**할 계획

* 광역철도(70%), 광역도로(50%), 광역BRT(50%), 환승센터(30%)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반영 >

49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 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 주요내용

○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사업 발굴**(15개 사업, 총사업비 21,916억원)

- 광역도로 10, 광역철도 1, 공영차고지 2, 환승센터 2

구 분	사업 (개소)	규모 (km)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국비 (억원)	비 고
계	15	-	-	21,916	10,772	-
광역도로	10	68.6	확장 5개소, 신설 5개소	18,030	8,673	국비 50%
광역철도	1	76.0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	2,520	1,764	국비 70%
공영차고지	2	-	버스 1개소, 화물 1개소	380	39	-
환승센터	2	-	KTX익산역, 광역철도 남군산역	986	296	국비 30%

○ 국토부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 추진**

* 시도 수요조사('25.9.), 기재부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26.上 확정·고시** 예정

□ 추진상황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 : '25. 4. 22.

○ 전주권 광역교통 협의체 구성·운영 : '25. 5.~

* 道,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전북연구원, 전주시정연구원

○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25. 6.~

* 국토연구원,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사업 발굴 및 사업별 타당성(B/C) 분석 등

○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수요조사 제출(道→국토부) : '25. 9.

○ 「대광법」 시행령* 개정 및 「대광법」 개정안 시행 : '25. 10. 23.

* **(전주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및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완주군

□ 금후계획

○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확정·고시(국토부) : '26. 上

참고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안)

구 분		사 업 명	연장 (km)	총사업비 (억원)	국비 (억원)	비고
15개 사업			-	21,916	10,772	-
광역도로		소 계 (10개 사업)	68.6	18,030	8,673	-
	1	전주 에코시티~완주 삼봉지구(과학로) 도로확장	4.3	912	456	6차로 확장
	2	전주 평화~완주 구이 도로신설	6.5	2,165	1,000	4차로 신설
	3	전주 효자~완주 이서 도로확장(지방도716호)	6.0	2,006	1,000	6차로확장, 입체화
	4	전주 반월~익산 용제 도로확장(지방도723호)	9.6	1,949	975	4~6차로 확장
	5	전주 효자~김제 금구 도로신설	4.2	1,670	835	4차로 신설
	6	전주 송천~완주 봉동 도로신설	9.5	2,470	1,000	4차로 신설
	7	전주 종합경기장~완주 구이 도로확장(백제대로, 모악로)	10.0	2,045	1,000	6차로확장, 입체화
	8	전주 금상~완주 용진 도로확장	7.2	1,725	863	4~6차로 확장, 입체화
	9	전주 효자~완주 혁신도시 도로신설	4.8	1,091	545	황방산터널 등
	10	전주 송천~완주 삼례 도로신설	6.5	1,998	999	4차로 신설
광역철도	-	전북권 광역철도(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	76.0	2,520	1,764	-
공영차고지		소 계 (2개 사업)	-	380	39	-
	1	전주·완주 버스 공영차고지	-	130	39	-
	2	완주 봉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	250	-	-
환승센터		소 계 (2개 사업)	-	986	296	-
	◆1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	586	176	민자(1,914억원)
	◆2	전북권 광역철도 남군산역 환승센터	-	400	120	-

※ 기재부 내부 지침에 따라 "광역도로" 연장 수도권 5km, 지방권 1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기준 2,000억원까지 국비 50% 보조



5 기회발전특구 추진 관련

기업유치팀장	기업유치과장
박선애 (3545)	양선화 (2401)

□ 사업개요

○ **(지정현황)** '24. 6월 1차 지정, '25. 7월 2차 지정

- **(1차 지정)** 4개 시(전주, 익산, 정읍, 김제), 3개 분야, 7개 산단, 88.4만평

※ **(전주)** 탄소융복합 29만평 / **(익산)** 바이오 15만평 / **(정읍)** 바이오 7만평 / **(김제)** 모빌리티 37만평

- **(2차 지정)** 남원시, 라이프케어 분야, 1개 산단, 15.5만평

○ **(공모선정)** 특구 내 투자기업 인력양성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

- **(예산/기간)** 360백만원(국비 240, 도비 36, 시비 84) / '25. 3. ~ 11.

- **(사업내용)** 김제 모빌리티 특구 투자기업이 필요로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재직자·신규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발굴·운영

□ 추진상황

○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 공모사업 선정 : '25. 3월

○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시(산업부) : '25. 7월

○ 기회발전특구 제도, 지원사항 등 시군 워크숍 개최 : '25. 8월

○ 추가지정을 위한 시군 개별 컨설팅 후 수요조사 : '25. 10월

□ 금후계획

○ 시군 신청서 취합 및 기본계획 수립 : '25. 12월

○ 기회발전특구 잔여면적(96만평)신청 : '26년~

금융산업팀장	금융사회적경제과장
최낙구 (4595)	신미애 (3280)

6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 필 요 성

○ **(국가균형성장)** 세계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 금융허브 조성으로 지역발전 불균형 완화 및 국가균형성장 기반 구축

○ **(지역특화 금융생태계 조성)** 지역특화산업인 농생명·기후에너지 산업을 연계한 생태계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지역 신성장 동력 마련

□ 추진상황

○ 국민연금공단 본사 **이전**('15년), 기금운용본부 이전('17년)

○ 문재인·윤석열정부 공약 반영('17/'22년) 및 금융중심지 지정 권고사항 이행(금융위, '19~)

구 분	이행 상황
❶ 인프라 개선	①**전북금융센터 건립**('27년 완공), ②국민연금공단 글로벌기금관 준공('21.4월), ③전북테크비즈센터 준공('21.5월) ④**국내외 금융기관 16개사 유치**(BNY, SSBT 등)
❷ 금융모델 구체화	①**'전북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모델' 방향 설정** ('19년 연구용역) ②**'특화 금융모델 실행과제' 발굴** (자산운용·기후에너지·스마트농생명 / '24년 연구용역)
❸ 이행계획 제시 및 성과	① **(전문인력 양성)** 기금운용 전문인력 130명, 지역대학 백오피스인력 210명 ② **(금융혁신 생태계)** 핀테크기업 양성('19~), 금융 빅데이터센터 구축('22~), 금융혁신 공유오피스 조성('23~) ③ **(제도적 기반 확충)**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등 금융특례 발굴(5개) 및 조례 개정('24.12월) ④ **(금융역량 강화)** 도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실용금융교육 추진('25년~)

○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을 위한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추진**

- 자문·논의(1~3월), 전북연 현안과제 선정 및 개발계획안 마련(3~9월),
- 공고(10.31~11.20), 도민·기업·전문가 및 도의회 의견청취(11.4~12.15)

※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4조)
: 개발계획 수립 제출(시도지사) → 지정 심의(정부금융중심지추진위)→ 지정 고시(금융위)

□ 금후계획

○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도시계획 심의 : '25. 12월

○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및 **금융위 협의·제출** : '25. 12월

○ 금융공공기관(한국투자공사, 공제회 등) 유치 활동 전개 : 연중

참고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주요 내용**

1 지정 필요성

○ **(연기금 기반 자산운용 특화전략 실현 및 국가균형성장 발판 마련)**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 금융허브 조성**으로 **지역 발전 불균형 완화 및 국가균형성장 발판** 마련

○ **(지역특화 금융생태계 조성)** 지역의 특화산업인 농생명산업과 기후에너지 산업을 활용한 **농생명금융 및 기후에너지금융을 집중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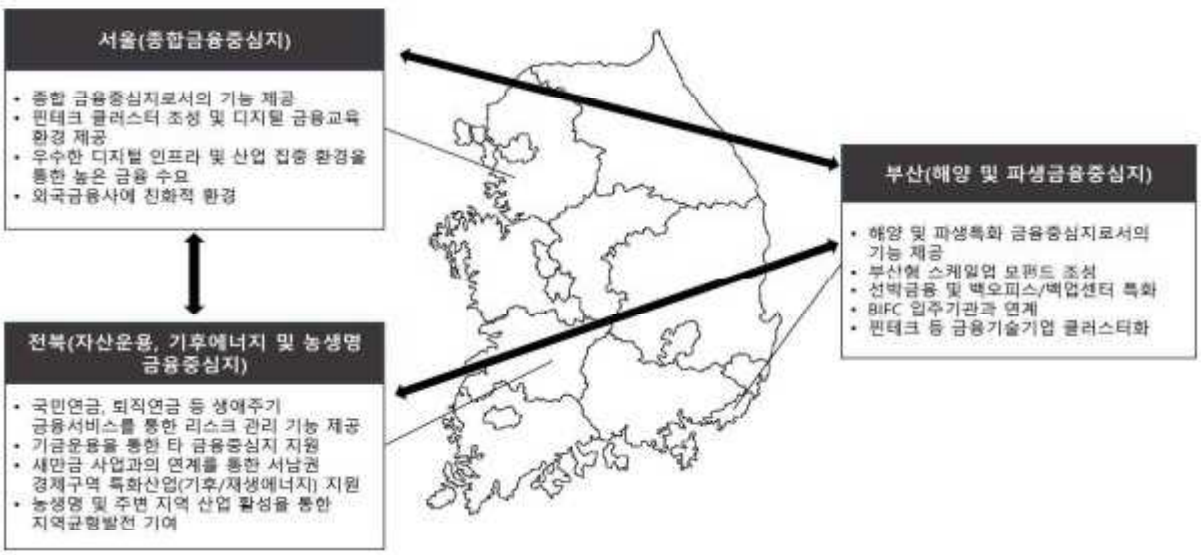
➡ **자산운용 및 농생명산업의 선두주자로서 금융특화 기능의 차별화가 명확, 국제경쟁력 강화 기대**

2 금융중심지 모델

○ '전북 -서울 -부산'의 **국내 금융중심지 삼각축**으로서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특화 금융 중심의 금융생태계 구축

- 3개 영역별 특화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핀테크기반 RA(전자적 조언장치), STO(토큰증권), 디지털화폐(스테이블코인, CBDC 등)의 기술 및 연관산업 육성





<국내 금융중심지 삼각축>

3 개발계획

○ **(명칭) 전북금융중심지**(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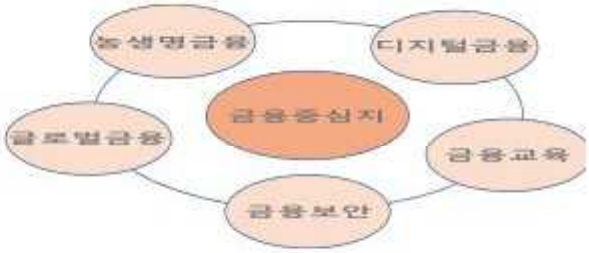
○ **(위치 및 면적)** 전북 혁신도시 및 만성지구 일원(3.59㎢, 약 109만 평)

○ **(개발방향)** 중심업무지구, 배후주거지구, 지원업무지구를 중심으로 ①**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금융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 ②디지털금융 활용 **핀테크 연계 거점화**, ③금융중심지 인프라 구축 등 추진

권역 구분	주요 내용	면 적
중심업무지구	전북국제금융센터, 전북 금융혁신 클러스터 복합단지 등 신규 조성 및 기 조성된 업무공간 기반 금융중심업무 특화지구 조성	0.14㎢
지원업무지구	중심업무지구의 금융 업무를 지원하고 다양한 상업활동을 위한 오피스단지로 조성 * 법조타운, 방송국 등 기 조성, 핀테크육성지구 예정	1.27㎢
배후주거지구	각종 주거편의시설이 기조성되어 있으며, 내외국인이 조화를 이루며 거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 * 병원, 학교, 도서관, 복합문화센터 등	2.18㎢



<전북금융중심지 구역 및 설정도>



<개발 방향(안)>

4 지원계획

○ **(이전기관 인센티브)** 입지보조금, 사업용 설비설치 자금,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금융전문인력 양성)**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설, 기관별 금융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해외 MBA/연구소 유치 등 추진

○ **(글로벌 접근성 개선)** 새만금 신공항(국제/국내선 취항, '29년 개항), 새만금 신항만(부두 9선석 규모, 2026년 개항)을 개발하여 글로벌 접근성을 개선

○ **(광역 접근성 개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새만금포항고속도로), KTX 광역복합환승센터, 전주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통한 광역 접근성 개선

○ **(K-문화향유 확대)** 한옥, 한식, 판소리 등 K-컬처의 원조인 지역적 강점을 살려 혁신도시 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K-문화 향유기회 제공 확대

○ **(글로벌 수준 교육 인프라 확보)** 새만금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설립을 통해 금융전문인력 유치와 장기근속 유도

7 5극3특 관련, 「전북특별법」 개정 추진 상황

입법실행팀장 특례정책팀장	총괄지원과장
김연옥(2903) 오지영(2911)	이수행 (2730)

□ 필 요 성

○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반영**으로 **전북도 성장동력 확보** 및 위상 강화

- '5극 3특' 실현을 위한 핵심특례* 반영으로 **실질적 자치역량 확보**

* (예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재생의료특구 지정, 수소경제 이행 시범사업 시행 특례 등

□ 추진상황

<'24년 발굴 특례 기반 입법 추진>

○ **(의원입법)** 산업·민생분야, 조문보강 등 **의원발의**(42건) → **수용 17건**

- 행안위 위원장 및 간사, 소위 의원실 등 법안 통과 건의('24.8.~'25.11.)
-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24.11.20.), 법안 소위에 상정('25.7.8./8.26./11.20.) 되었으나, 심사방향 토론 후 논의없이 산회
- 전북, 강원, 제주, 부산법 등 4개 지역법안이 소위에 계류되어 있고 신속 통과에 대한 위원간 이견* 존재

* 개정법(전북·강원) 통과 필요성 다수 위원 공감, 이성권의원(부산법 발의 의원)은 부산법도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견

○ **(정부입법)** 농생명 등 258건 발굴, **입법과제 44건 선정 → 수용 12건**

- 15개 부처 대상 설명 활동('24.4.~), 지역 국회의원 협업 정책간담회('24.9.)
- 국조실 주관 조정회의('25.2~3.), 정부입법 추진 협조(도→국조실→행안부, '25.6~7월)

<'25년 특례 발굴 및 수용성 제고 활동>

○ 농생명, 미래첨단 등 특례 159건 발굴 및 **입법과제 55건 선정**

- 전문가 간담, 지역특구법 등 타법 검토, 시군 컨설팅 통해 발굴(~'25.7.)
- 전문가, 사업추진 부서 등과 실효성·타당성을 검토 입법과제 선정('25.8.)
- 세미나 등을 통한 논리보강 및 실국별 13개 부처 대상 설명 활동('25.9.~)

□ 금후계획

○ 전북-강원 공동 건의활동(발의의원실, 양당간사, 소위 의원 등) 적극 대응

○ 정부입법 수용 과제(12건) 행안부 정부입법 절차* 진행(의원입법 통과 이후)

* 입법예고, 규제심사(행안부) → 법제심사(법제처) → 차관·국무회의(행안부) → 국회제출(행안부)

○ '25년 입법과제(55건), 국조실 주관 부처 의견수렴 및 조정회의('25.12월~)

8 서울대 10개 만들기 준비 관련

대학협력팀장	교육협력과장
김도연 (4596)	김호식 (2810)

□ 정부동향

○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관계부처, 대학, 전문가, 산업계 등 의견수렴 후 12월 중 확정안을 발표예정

□ 추진방향

○ 거점국립대를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기반 연구대학으로 육성 ➡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융합 인재 양성

○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우수인재의 수도권 쏠림 완화 ➡ 수도권-비수도권 교육격차 및 과열 입시경쟁 완화

□ 주요내용

○ **(특성화 연구대학)** 대학별 **5극3특 성장엔진 전략산업**과 밀착된 **특성화 분야의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육성

- 기업·출연연·과기원·지역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 핵심인재 양성 및 연구성과 창출
-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규제특례, 연구비·정주 등 지원패키지 마련

○ **(학부교육 혁신)** 거점국립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AI·글로벌 기본역량을 갖추고 기업이 선호하는 생생한 현장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 AI 기본교육, 글로벌 학습 기회 제공, 지역 앵커기업과 연계한 취업 보장 계약학과 운영 등

○ **(지방대 동반성장)** RISE 체계를 통해 거점국립대의 교육과정·교원·연구장비·인프라의 **지방대 공유 및 공동연구를 확대**하여 지방대의 경쟁력 제고

□ 금후계획

○ 거점국립대 육성 방안 TF 구성 및 MOU 체결(도, 전북대) : '25. 12.~

○ 교육부 5극3특 방향과 연계 전북 RISE 재구조화 준비 : '25. 12.~

4.2. 간 담 회

Ⅰ. 균형발전 현안공유 간담회 ····· 133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균형발전 정책 주요현안 공유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미래첨단산업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목 차

〈기획조정실〉

1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주요 현안 대응계획

2 통합지자체 인센티브 대응 방안

3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미래첨단산업국〉

4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추진 현황

〈특별자치교육협력국〉

5 전북특별법 개정 및 특별자치시도 협력 추진 현황

1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주요 현안 대응 계획

기획팀장	정책기획관
유승현 (2085)	김철태 (2110)

□ 정부동향 및 시사점

○ **(정부동향)** 정부는 '기재부경제성장전략(1.9.)'과 '국무총리행정통합 지원방안(1.16.)'을 잇달아 발표하며, **미래 성장**(에너지·AI)과 **균형발전**(5극 지원) 드라이브 가속화

○ **(시사점)**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대형 국책사업 발굴을 통해, 통합지자체(5극) 쏠림 현상을 극복하고 전북 독자권역(3특)의 성장 동력 확보

□ 대응방향

○ **(기조대응) 단순 지역 숙원 사업이 아닌, 정부의 신성장·균형발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현한다는 논리로 국책 사업화 유도

○ **(선택집중) 정부 기조에 부합하고 사업 타당성이 검증된 과제**를 중심으로, **행정 및 정치적 가용역량 집중**

□ 주요내용

○ **(미래산업 분야) 새만금 기반의 에너지·AI 융복합 산업 생태계 조성**

- ①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②새만금 RE100 선도 산단 지정, ③새만금 첨단전략산업기지 구축, ④헴프(Hemp) 클러스터, ⑤자이언트 스마트팜

○ **(균형발전 분야) 국가 균형발전 거점 육성 및 국가적 성장축 도약**

- ①2036 하계올림픽 유치, ②제2차 공공기관 이전, ③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④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 **(입법건의) 전북 독자권역 위상 정립 및 신산업 뒷받침을 위한 필수 입법 실현**

- ①전북특별법개정, ②공공의대법제정, ③재생에너지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④법원설치법개정, ⑤새만금사업법개정, ⑥헴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 향후계획

○ **전북 핵심과제의 정부 반영**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원팀'**으로 **입법 지원**(특별법 개정 등) **및 예타 면제** 등 전방위적 건의 활동 추진 : '26. 1.~

참고1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2대 분야 핵심 과제(9건)

분야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균형발전	1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 **(개요)** 지역분산형 개최를 통한 국가균형성장 실현 및 기존 경기장 활용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지속가능한 스포츠 도시 모델 창출 ◦ **(내용)** IOC의 유연한 절차에 대응하여 국가 주도 유치 체계를 구축하고 대회 유치를 명분으로 SOC 조기 구축 등 국가적 지원 확보
	2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 **(개요)** 지방 소멸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전북 주력 산업인 금융 농생명 분야 핵심 공공기관 우선 배정 필요 ◦ **(내용)** 농생명 1차 이전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전략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차 핵심 기관 집중 유치
	3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 **(개요)** 국민연금공단 중심의 자산운용 기능 집적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고 글로벌 투자 대응력 강화로 금융경쟁력 제고 ◦ **(내용)** 기금운용 기능이 집적된 전북에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를 지정하여 투자와 금융이 연계된 국가금융거점 조성
	4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 **(개요)** 국유지 활용으로 사업비 절감이 가능한 영호남 교통 요충지 남원에 경찰 교육 거점을 조성해 균형발전 실현 ◦ **(내용)** 연간 5천 명 교육생 유입으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낙후된 동부권 경제를 활성화하여 모두가 잘사는 지방시대 견인
미래산업	5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 **(개요)** 다품종 소량 유연생산 등 전북 제조업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피지컬 AI 핵심기술 자립화 추진 ◦ **(내용)** 기술개발부터 실증 확산이 연계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해 실질적 제조혁신 구현 및 후속사업 연계
	6	새만금 RE100 선도 산단 지정	◦ **(개요)** 탄소장벽 대응을 위해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만금을 RE100 산단으로 조성하여 대규모 기업 유치 기반 마련 ◦ **(내용)** RE100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새만금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에너지 전주기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
	7	새만금 첨단전략산업기지 구축	◦ **(개요)** 새만금사업의 한계 극복과 전략산업 기지 도약을 위해 성장엔진 메가특구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한 글로벌 샌드박스 도입 ◦ **(내용)** 전략산업 규제 제로화와 패키지 지원(SOC·R&D 등)을 위해 새만금을 포함한 메가특구로 지정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방위 지원
	8	새만금 헴프 클러스터 조성	◦ **(개요)** 급성장하는 글로벌 헴프시장 선점을 위해 규제완화 및 신산업 일괄지원 가능한 국가 차원의 육성체계와 기반 마련 ◦ **(내용)** 합법적 산업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정책적 지원
	9	새만금 자이언트 스마트팜	◦ **(개요)** 스마트팜 R&D 성과 산업화 연결을 위한 대규모 테스트베드 부재로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미래 농업 선도 ◦ **(내용)** 농업대전환 핵심거점인 새만금에 국가농업 AX 플랫폼 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

참고2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입법 건의(6건)

법률명	주요내용
개정 **1. 전북특별법 개정**	▸4개 특별법 중 쟁점 법안(부산) 분리 및 2월 임시회 우선 상정·통과로 실질적 자치권 확보
제정 **2. 공공의대법 제정**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제정 **3.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 조성
개정 **4. 법원설치법 개정** **(전주가정법원 설치)**	▸가사·소년 사건의 전문적 처리와 도민 사법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개정
개정 **5. 새만금사업법 개정**	▸내부개발 가속화 및 핵심 기반 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마련
제정 **6. 헴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고부가가치 헴프(Hemp)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안전한 산업화 기반(특별법) 조성

2 통합지자체 인센티브 대응 방안

균형발전팀장	정책기획관
배정아 (2225)	김철태 (2110)

□ 정부동향

○ 정부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 설계도'('25.9.30./지방위) 발표 후,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자체 통합 정책 적극 추진

○ 특히, **통합**에 대한 **4대분야 인센티브**를 공표하여 자발적 통합 유도('26.1.16.)

《 통합지원 인센티브 》

- 재정지원 : 최대 20조원(연5조·4년),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등 신설
- 위상강화 :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로 자율성·책임성 확대
- 공공기관이전 : 2027년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선 고려
- 산업활성화 : 신설 특구에 기회발전특구 수준 세제 지원, 임대료·지방세 감면 등

□ 문제점

○ 정부안은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전제 초광역권인 5극에만 인센티브 부여**, 독자적 발전모델을 선택한 **3특 소외 우려** 발생

□ 우리도 추진현황

○ **(공공기관 2차 대응기반 마련) 공공기관이전 TF**를 통해 **금융·농생명 등 전략산업 중심**의 추가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 ①공공기관이전 TF구성.운영('26.1월), ②실국별 2차이전 전략회의 개최(3회), ③지방시대위 면담을 통한 정부동향 파악('26.1.22.)

○ **(5극3특)** 설계도 발표 후, **초광역 편중 우려 해소 정책** 반영 추진

- **신규 특례 발굴 및 5대 핵심산업 중심의 전북특별법 일부 개정추진('26.1.30.)***

*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 통합법안 특례 등을 반영 윤준병 의원 발의(신설 190개 조문보완 12개)

- 3특지원 반영 **초광역특별계정 개선** 추진*

* ①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초광역특별계정 3특포함 개선** 건의('25.12.12./지방위)
②**'초광역특별계정 내 3특 특별광역권' 신설** 방안 제언('25.12월/전북연 이슈브리핑)

□ 대응계획

○ 전북은 국가 정책·산업 실증을 수행하는 **테스트베드**인 **5극 3특의 핵심 거점**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반영**한 정부 정책수립 지속 건의

○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 및 **초광역특별계정 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 반영 강력 추진

- ①전북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별 맞춤형 공공기관 전북 최우선 이전**
- ②**3특의 지위를 법령에 명시, 3특 지원 초광역특별계정 설치, 3특 지원방안 제도화**
- ③지역 맞춤형 **성장엔진 선정, 행재정 지원 등 전북도 특례반영** 적극 추진

공공기관 TF팀장	정책기획관
배정아 (2225)	김철태 (2110)

3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 정부동향

○ (국토부)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 및 기능 분석** 착수
※ (국토부 추진일정) 전수조사('25. 하반기) → 대상기관 확정('26년) → 이전 실행('27년)

○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실질적 정주 여건**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과 후속 대책 마련 중

【 대통령 발언('25.12.30.) 】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했음에도 **지역경제 기여 효과가 체감**되지 않고, **직원들의 수도권 이동 등**으로 이전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실질적 경제 효과 확보 대책 마련 주문**

□ 우리도 추진현황

○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와 한계를 종합 분석**하여 추진 전략 수립
- 이전 공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방안 연구** 용역(정책평가연구원/'24.5월)
- 2차 공공기관 이전 **연계 지역 발전전략** 수립(전북연구원현안과제/'25.11월)

○ 공공기관 이전 TF 구성·운영('26.1.~)을 통해 전담 대응체계 구축 및 중앙부처 대응·협의 지속

○ 「**지역 현황 조사표* 작성·제출**(국토연 요청, 국토부 용역 추진 중)」 (~'26.2.6.)
*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 추진에 따른 **지역현황·건의사항 등 파악**을 위한 자료
- 조사표 최종(안) 지역정치권 협의('26.2.5.) → 의견 반영 후 최종 제출

□ 쟁점사항

○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다수가 인근 광역자치단체 및 **타시도와 중복 경쟁 중**으로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 우려
- 1차 이전의 **세수·인구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2차 이전**은 **기능 보완형·재정 기여형 기관 중심의 이전** 건의 필요

○ 정부정책에 전북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의 긴밀한 공조** 필요
- 국회·중앙부처 대응 과정에서 도의회의 정책적 뒷받침 및 공동 건의 등 요청

□ 대응계획

○ **국토부 이전 계획 수립 과정에 맞춰** 전북 논리의 체계적 정리 및 지속 건의

○ 이전 **대상기관별 구체적 연계 전략·파급효과 자료 고도화**로 설득력 강화

4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추진 현황

미래산업 기획팀장	이차전지탄소 산업과장
백순금 (3245)	최재길 (3260)

□ 추진배경 및 개요

○ **(추진배경)** 정부에서는 **지방이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의 투자유치와 연계한 **권역별 성장동력 산업을 선정·지원계획**

> " 수도권 일극체제의 구조를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 5극3특 체제는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25.7.3))

○ **(선정기준)** ①산업기반, ②성장가능성, ③기업 투자 규모 ※앵커기업 투자계획 제시

○ **(주요내용)** 5극3특별 성장엔진 **산업 선정**(2~3개) 및 **5종 패키지 지원***

* ①인재양성, ②강력한 규제완화, ③R&D·인프라 지원, ④재정지원, ⑤펀드지원

□ 추진경과

○ 성장엔진 희망산업 **제출** : '25. 10. 15.

○ 산업부와 **성장엔진 산업 발굴·선정대응 간담**(8회) : '25. 10.~'26. 1.

* 산업부 장관, 실장급(2회), 국장급(2회), 과장·담당서기관 등(3회)

<산업부 성장엔진 산업 검토 상황>

▶ **(선정방향)** 산업여건, 성장가능성, 기업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산업 생태계 형성과 파급효과가 있는 성장엔진 산업 선정

▶ **(검토상황)** 1순위 신재생에너지·2순위 첨단AI모빌리티, 3순위 푸드·헬스테크 긍정 검토 단. 푸드·헬스테크는 앵커기업 부족, 타시군과 중복성 해소 필요

□ 쟁점사항

○ 타 권역(강원·중부권) 대비 푸드·헬스테크의 차별성 부족

- **강원**(천연물), **중부권**(의약품) **등 기 구축된 선점 분야**와 중복성이 높음
- **헬스 분야 연관 기업 풀이 협소, 민간 주도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 부재**

➡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미생물 중점), 방사성 동위원소·오가노이드 등 타 권역이 없는 특화 인프라로 차별화 노력, 새만금 메가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중심 생태계 구축

□ 우리도 성장엔진 산업(안)

1 신재생에너지산업

○ **산업 성장의 상호 촉진과 에너지 생태계 조기 형성**

- 새만금 7GW 재생에너지 발전 및 전력 잉여분을 저장·운송 가능한 **수소로 전환(P2G)**한 **에너지 생산-저장-활용의 완전한 밸류체인** 형성 가능

○ **민간 투자 유치와 탄소중립 기여**

- RE100산단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수소생산·저장→연료전지→모빌리티로 이어지는 대규모 시장 창출 및 탄소중립 기여**

2 첨단 AI 모빌리티 산업

○ **피지컬 AI 기반 확보 및 상용차 AX전환 기반 제공**

- 과기부 **선도형 AI 융합사업**(389억원) 유치 및 **예타 면제**(총 1조원) 등 **피지컬 AI 성장기반** 기 확보

- 중대형 상용차 최대 생산지로 **새만금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및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와** 피지컬 AI기반이 **연계하여** 최적의 AX전환 기반 제공

3 푸드 · 헬스테크 산업

○ **국책 연구기관**-대학병원의 유기적 연결과 「전북특별법」 특례·**새만금 메가샌드박스**를 결합하여 **제품 신속 상용화 및 비용 효율성 우위**

○ 그런 바이오로부터 이어지는 **풍부한 천연물·미생물 자원**을 오가노이드, 바이오프린팅 등과 융합하여 **첨단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및 정밀의료 분야로 산업 고도화 가능**

□ 대응계획

○ RE100, 피지컬AI,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과제 정합성** 연계를 강화하고, 새만금 산업단지, 특장차 생산거점 등 **차별화된 인프라 및 강점 부각**

○ 지휘부에서 실무진까지 **산업부 스킨쉽을 확대**하고, **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성장엔진 산업 생태계 구축 가능성 입증**

5 전북특별법 개정 및 특별자치시도 협력 추진 현황

특별자치도기획팀장 입법실행팀장	총괄지원과장
이윤정(2906) 김원태(2903)	장윤경 (2730)

□ 추진배경

○ 5극 3특 국정과제 및 산업·민생특례 보완을 위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특별자치시도 공동 대응

□ 추진상황

① 전북특별법 2차 개정 및 특별자치시도 공동대응

○ **(발의현황) 산업 및 민생분야 특례, 제도 보완 등 46개 입법과제**
- 46개 과제 중 부처에서 **21개 수용, 25개 불수용**

※ 한병도·조배숙 의원('24.7.31./14건), 이원택 의원('24.8.23./2건), 안호영 의원('24.11.23./26건), 윤준병 의원('26.1.20./4건)

›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
- 청년농업인 연령 확대(40~44세) 및 행·재정 지원 근거마련,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 도내 생산 자동차 중 특수 설비를 출고 전 도내 다른 장소에서 설치할 경우 임시운행허가 가능

› **지방소멸 대응** 및 **청년 및 외국인 유입 기반** 마련
- 도내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기부금품 적극 모집 한시적(3년) 허용
- 도내 글로컬대학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영주권 취득기간 단축
-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근거 마련(공무원,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 **(입법현황)** 행안위 법안 소위에 상정('25.7.8./8.26./11.20.) 되었으나, 전북·강원·제주·부산 **지역 4법 동시 의결을 이유로 심사 보류**

○ **(국회대응)** 행안위 위원장·간사 등 소위 의원실 방문, 조속 법안통과 건의(지속)

○ **(공동대응)** 특별자치시도 공동성명 발표(1.21.) 전북-강원 상생협력 간담(1.22),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국회 입법촉구 결의대회 및 원탁 토론회(2.4.)

② 행정통합법안 대응 전북특별법 개정안 발의

○ **(발의배경)** 전남·광주 등 통합법안이 2월 통과를 목표로 발의*

* ㉮전남광주 387개 조문(1.30), ㉯충남대전법 314개 조문(1.30), 대구경북 ㉰335개 조문(1.30), ㉱323개 조문(2.2)

○ **(발의현황)** 윤준병 의원 발의(1.30.), 조문 현행 131개 + 신설 190개 → 개정안 321개

○ **(주요내용)** 재정분야, 산업 분야 육성 등 통합법안 특례 반영

› 실효성 있는 특례실행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도에서 징수되는 주요 국세 일부를 교부(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입액과 수요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25%이내 가산

› **5대 핵심산업** 및 **3대 기반** 강화
- 푸드테크산업 육성, 영농형 태양광 지구 도지사 지정, 미래산업 전환 촉진지구(방산, AI, 모빌리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 특례, 신기술 개발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위한 규제 완화, 전략산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금후계획

○ 전북특별법 신속 개정 위한 전북-강원 공조 대응 및 국회 방문 추진(지속)

○ 국조실-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추진단 회의(3월)

4.3. 주요 일간지 보도내용

전북 균형발전특별위원회 관련 보도자료

[신문·통신 스크랩]

연번	구 분	제 목	일 자
1	회 의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위 새롭게 출범	2025.6.17.
2		도의회 전북 균형발전특위 활동계획안 채택	2025.7.24.
3		도의회 균형발전특위 현안논의	2025.12.1.
4		전북 균형발전 특위 활동 마무리	2026.6.11.
5	간담회	초광역화시대 '전북 몫' 확보 선제 대응	2026.2.9.
6	토론회	"맞춤형 전력공급 모델 먼저 제시해야" 전북도의회, 반도체 기업 유치 전략 토론회	2026.1.22.
7		서난이 도의원, 기업유치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토론회	2026.1.26.
8		"새만금 사업, 국가·지역·시민사회 참여 거버넌스 필요"	2026.3.6.
9	성명서	"농진청 일부부서 수원 이전 계획 철회를"	2025.8.21.
10	입장문	"부산시, 제3금융중심지 딴지 걸지마" 전북도-도의회 정책왜곡 중단 촉구	2026.2.26.
11	결의안	도의회,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	2026.7.28.
12	도정질문	"공공기관 유치단 전략·방식 쇄신을"	2025.6.12.
13	5분발언	최형열 "대광법 개정안 의결 따라 신속 후속 조치를"	2025.10.21.
14		서난이 도의원 "전북~세종 30분 교통망 구축, 전북 생존전략 될 수 있다"	2026.2.6.

1 [2025.6.17. 제1차 회의]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위 새롭게 출범

새만금일보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003면 종합

도의회, 전북 균형발전 특위 새롭게 출범

서난이 위원장·정종복 부위원장

"전략과제 정면 돌파" 포부 밝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서난이 의원, 부위원장에 정종복 의원을 선출했다.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12일 제419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총 11명의 의원으로 정종복(전주3), 최형열(전주5), 한정수(익산4),국주영은(전주12), 김동구(군산2),나인권(김제1), 서난이(전주9), 김성수(고창1), 이명연(전주10), 장연국(비례), 윤수봉(완주1)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2025년 6월 12일부터 2026년 6월 11일까지 1년이다.

전북 균형발전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난이 의원(전주9)은 "이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책의 수혜 대상이 아닌 실천 주체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특위활동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대기 기자

전북도민일보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015면 사람들



전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서난이 의원, 부위원장에 정종복 의원을 선출했다.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제419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정종복(전주3), 최형열(전주5), 한정수(익산4), 국주영은(전주12), 김동구(군산2), 나인권(김제1), 서난이(전주9), 김성수(고창1), 이명연(전주10), 장연국(비례), 윤수봉(완주1) 등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김성아 기자

2 [2025.7.24. 제2차 회의] 도의회 전북 균형발전특위 활동계획안 채택

전주매일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003면 종합

도의회 전북 균형발전특위 활동계획안 채택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난이·전주9)는 23일 제420회 임시회 기간 중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고, 기획조정실 등 관계 부서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균형발전특위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유치 △금융산업 기반 강화 △광역교통망 확충 △기회발전특구 추진 등 지역의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략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활동계획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서로부터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 정책 추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 상황 △기회발전특구 추진 상황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 상황 △전북특별자치도 위상강화 방화 마련 △'서울대 10개 만들기' 준비 관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업무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형열 위원(전주5)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전북도가 55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구성된 유치추진단의 활동이 총 5회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소극적인 대응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유치 대상 기관에 대한 전략적 분석과 실질적인 유치 활동 강화를 주문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명연 위원(전주10)은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동부권 발전계획에 국한하지 말고, 전북도 14개 시·군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주영은 위원(전주12)은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과 관련해 전북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 연결을 넘어 14개 시·군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난이 위원장(전주9)은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하여, 농생명산업의 최적지인 전북이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낼 때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3 [2025.12.1. 제3차 회의] 도의회 균형발전특위 현안논의

全北日報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003면 종합



도의회 균형발전 특위 현안 논의 지난달 28일 전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 및 도내 사군 간 균형발전 정책 추진 △5극3특 관련, 전북도의 전략 방안 △'대광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 상황 등에 대한 2차 업무보고를 듣고 주요 현안별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4 [2026.6.11. 제4차 회의] 전북 균형발전 특위 활동 마무리

전북중앙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003면 종합

도의회 균형발전특위 금융중심지-기회발전특구등 정책 제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난이)가 1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의정 활동 성과와 향후 정책 제언을 담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2025년 6월 지방정부의 균형발전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구성된 특위는 그동안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기회발전특구 및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특위는 활동 기간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간담회를 통해 도의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정책토론회 개최, 성명서 및 입장문 발표, 결의안 채택, 도정 질문 등을 통해 전북의 현안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반도체 · 재생에너지 · AI 신산업 대응 전략 토론회를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생태계 조성과 기업 유치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의 수도권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하는 등 지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도 병행했다.



특위는 이날 활동을 종료하며 향후 과제로 △균형발전 전담 조직 확충 및 상시 대응체계 구축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른 전북의 위상 확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전략 실행력 강화 △전북특별법 개정 및 특별회계 등 제도적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서난이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전북의 몫을 확보하고자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왔다"며 "전북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현안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 정치권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위 활동은 종료되지만, 전북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5 [2026.2.6. 간담회] 초광역화시대 '전북 몫' 확보 선제 대응

全羅日報 2026년 2월 9일 월요일 001면 종합

초광역화시대 '전북 몫' 확보 선제 대응

도-의회 주요현안 전략 논의

정부의 초광역 중심 균형발전 정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북의 성장 동력과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집행부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 배경이다.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난이)는 6일 도의회에서 '전북 균형발전 주요현안 공유 간담회'를 열고 지역주도 성장 전략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전북특별법 개정 등 핵심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균형발전특위 위원들과 도 정책기획관, 미래첨단산업국장,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등 관계 부서장이 참석해 추진 상황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정부의 통합지자체 인센티브와 5극3특 정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전북이 전략 없이 대응할 경우 또다시 정책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서난이 위원장은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 이전 논의 등 변수가 많은 상황이지만 오히려 전북에 유리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시점"이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전북특별법 개정, 3특 제도화 등 핵심 과제에서 전북의 몫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주요 현안별 대응 논리를 구체화하고 도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정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황성조기자

전북연합신문 2026년 2월 9일 월요일 002면 종합

전북균형발전특위 현안간담회, 정책 공조

전북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난이)는 6일 '전북 균형발전 주요현안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초광역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전북의 균형발전과 자립적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 간 현황을 공유·점검하고 정책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서난이 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도 정책기획관, 미래첨단산업국장,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등 관계 부서장이 참석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대응 계획 ▲정부 통합지자체 인센티브 공표에 따른 전북 대응 현황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상황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전북특별법 개정 및 특별자치시도 협력 추진 현황 등이 중점적으로 공유됐다.

한정수 위원(민주당·익산4)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가려 전북의 균형발전 현안과 미래 전략이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며 "올림픽을 산업·에너지·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새만금을 활용한 RE100 적용 등 차별화된 준비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복 부위원장(민주당·전주3)은 "미래 전략산업과 공공기관 이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사람에서 시작된다"며 "균형발전 정책이 시설과 기관 이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교육·연구·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연 위원(민주당·전주10)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분산을 넘어 지역의 실질적인 재정 기반과 경제 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방세수 확충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기관을 중심으로 이전 대상이 검토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전략적 접근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난이 균형발전특별위원장(민주당·전주9)은 "최근 농협중앙회의 감사와 전남의 농식품부 이전 요구 등 여러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금이 오히려 전북에 유리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일 수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전북특별법 개정, 3특 제도화 등 핵심 과제에 대해 전북의 몫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각오로 균형특위를 중심으로 집행부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표 기자 hiphopy@naver.com

6 [2026.1.22. 토론회] "맞춤형 전력공급 모델 먼저 제시해야" 전북도의회, 반도체 기업 유치 전략 토론회

全北日報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003면 종합



지난 20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성공적인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맞춤형 전력공급 모델 먼저 제시해야"

전북도의회, 반도체 기업 유치 전략 토론회

전북이 가진 재생에너지 자원과 산업단지를 내세워 맞춤형 전력공급 모델을 먼저 제시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의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지난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연구원, 반도체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골든타임과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전북자치도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대규모·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도가 보유한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연계한 반도체 기업 유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서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인 동시에 막대한 전력과 인프라를 요구하는 산업"이라며,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북이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이범순 통상닥터는 "기업유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업이 우려하는 전력 수급 불안과 투자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며, "전북은 재생에너지 자원과 산업단지를 동시에 보유한 지역으로, 이를 연계한 반도체 맞춤형 전력공급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015면 사람들



서난이 도의원, 반도체 기업 유치 전략 토론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지난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성공적인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골든타임과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북자치도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대규모·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도가 보유한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연계한 반도체 기업 유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전북자치도,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연구원, 반도체 기업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성아 기자

7 [2026.1.26. 토론회] 서난이 도의원, 기업유치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토론회

全北日報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003면 종합



지난 22일 전북도의회 '성공적인 기업 유치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도의원, 기업 유치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토론회

영농형 태양광 도입이 농민 소득 증대는 물론 기업 유치 실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이 의회 토론회를 통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지난 2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연구원과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전북자치도, 기업 등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영농형 태양광을 둘러싼 제도·현장·정책을 아우르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영농형 태양광 도입 가능성을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연계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김영호 기자

새만금일보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003면 종합



서난이 의원, 영농형 태양광 도입 마련 토론회

농업 지속가능·경제 활성화 대안

전북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2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연구원과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전북자치도, 기업 등이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영농형 태양광을 둘러싼 제도·현장·정책을 아우르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새만금 농생명용지내 영농형 태양광 도입 가능성을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연계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자리였다는 평가다.

좌장을 맡은 서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전북자치도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임을 확인했다"며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져 전북자치도가 재생에너지와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대기 기자

8 [2026.3.6. 토론회] "새만금 사업, 국가·지역·시민사회 참여 거버넌스 필요"

全北日報 2026년 3월 6일 금요일 001면 종합

"새만금 사업, 국가·지역·시민사회 참여 거버넌스 필요"

새만금도민회의 등 정책토론
"기본계획에 의견 반영 제안"

현대자동차 새만금 9조원대 투자협약 이후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새만금도민회의와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 특위는 5일 전북자치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AI·반도체·신산업 전환시대, 새만금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5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새만금 새판짜기'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인 조준호 새만금도민회의 상임대표와 주제발표자, 지정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유민성 인턴기자

이날 토론회는 양광식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의 '국민주권시대 새만금 거버넌스 구조 제안과 과제'와 오창환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의 '새만금 RE100 산업단지와 영농형 태양광이 여는 국가 균형발전',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한국 RE100 위원회 위원장의 '기업이 바라는 새만금 RE100 산업단지와 전북자치도의 전략과 과제' 등 3개의 주제발표 후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양 교수는 "새만금 사업이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추진되면서 지역 참여와 갈등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환경, 행정구역, 개발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협의기구와 시민 참여 플랫폼을 제도화해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명예교수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요구하는 시대에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지역이 새로운 산업 입지로 부상하고 있고 넓은 부지와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춘 새만금이 RE100 산업단지의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해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면 농촌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상임이사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한 뒤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제도와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 체계가 따라줘야 기업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RE100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면으로 이어짐

백세종 기자

全北日報 2026년 3월 6일 금요일 002면 종합

▷1면 '새만금 사업, 국가·지역·시민사회 참여 거버넌스 필요'에 이어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조준호 새만금도민회의 상임대표이자 사)ESG코리아 이사장을 좌장으로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새만금위원회 위원), 이지훈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한운기 위에너지 대표가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해외사례로 본 새만금 거버넌스 방향과 전북 자치도형 분산에너지 특구 지적과 새만금 RE100 산단, 영농형태양광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RE100 산단 지정전략 등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 좌장인 조 상임대표는 "전략산업의 새만금 재배치 공론화, 그리고 새만금 RE100 산단과 재생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의 준비 진단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향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에 새만금도민회의 의견을 제안하고 반영하는 한편 새만금 권역 자치단체 통합 및 거버넌스 기구 구성에 대한 공론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9 [2025.8.21. 성명서] "농진청 일부부서 수원 이전 계획 철회를"

全北日報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003면 종합

"농진청 일부부서 수원 이전 계획 철회를"

전북도 주력 식품·바이오 분야 연구조직 해당
도의회 "시대 역행·국정과제 정면 위배" 지적

전북혁신도시내 농촌진흥청이 일부 부서를 수원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진 것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농촌진흥청은 대한민국 농업 연구와 농업인 지원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 수도로 성장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진흥청 일부 기능을 수도권으로 되돌리려는 발상은 명백히 시대 역행적이며 퇴행적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도의회는 "이 계획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정부 정책 기조를 거스르는 행위일 뿐 아니라 전북도민과 농업·농촌을 지켜온 농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농진청이 부서 이전계획을 철회하는 한편, 농진청이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으로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한편, 정부는 '농생명 산업 수도 전북'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적극지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농진청의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진청은 최근 조직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과정에서 작물병해충과 재배환경 연구기능을 제외한 식품 연구기능 부서를 수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주로 전북도가 주력하고 있는 식품과 바이오분야 핵심연구 조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세종 기자

전북중앙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002면 종합

농진청 일부 부서 수도권 이전 반발

민간협업 중요 빌미 수원 재배치 검토…도 전략 육성 식품-바이오분야 핵심연구 조직 파장 "정부기조 훼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이 이전 10년 만에 일부 부서를 수도권으로 되돌리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전북 지역 사회와 전북도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서가 전북도가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식품 · 바이오 분야 핵심 연구 조직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5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경기도 수원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이후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비와 사업비를 투입해 전북 지역의 농생명 산업과 현안 해결에 기여해 왔으며, 2,6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700억 원 이상의 지역 물품 구매 등 경제적 효과도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농촌진흥청이 식품 관련 일부 기능을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서는 식품 연구와 바이오 산업 관련 조직으로, 민간 협업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수원으로의 재배치가 검토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조직 기능을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병해충 및 재배환경 연구 기능은 전북에 남기고, 민간과의 연계가 필요한 식품 연구 기능은 수원으로 옮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이러한 설명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려오는 부서 또한 애초부터 전북 이전 대상이었던 만큼,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기능 확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북자치도의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계획이 "국가 비전과 국정 과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정부 정책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농촌진흥청은 전북이 농생명 산업 수도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핵심 기관"이라며, "일부 기능을 수도권으로 되돌리려는 발상 자체가 시대를 역행하는 퇴행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는 농촌진흥청에 대해 부서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에는 '농생명 산업 수도 전북'이라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임승식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은 "전북은 바이오 식품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이며, 수도권으로 기능을 옮기겠다는 계획은 전북 도민과 농업인들의 기대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오히려 수도권 기능이 더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새전북신문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002면 종합

도의회 "농진청 수도권 복귀 안될 말"

전북자치도의회가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의 수도권 복귀 움직임에 발끈했다.

도의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농진청 일부 부서 수도권 이전 계획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를 정면 위배하는 것이자,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정부정책 기조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그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또한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농진청의 일부 기능을 수도권으로 되돌리려는 발상은 명백한 시대 역행적이자 퇴행적 조치"라며 "전북이 대한민국 미래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존립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도의회는 18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성학 기자

전주매일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003면 종합

전북 정치권 "농진청 수도권 이전 계획 중단하라"



조지훈 대표



서난이 도의원

전북 정치권이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의 수도권 이전 계획에 대해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먼저, 조지훈 더민주 전북혁신회의 상임대표는 20일 이와 같은 논평을 내놨다.

조 대표는 "지난 19일 KBS 뉴스 보도를 보고 믿기 어려웠다"며, 이번 계획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을 핵심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23대 국정과제 중 5번으로 명시된 핵심 과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공식화했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난이 대변인은 "도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계획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 농업 발전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의 수도권 이전 계획 전면 철회 △정부 균형발전 기조에 맞는 지역 연계 기관 운영 △대통령 공약인 '농생명 산업 수도 전북' 실현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다르게 수도권 일부 부서와의 업무상 효율화를 위한 부서 이동에 불과하며 이전계획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민일보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006면 경제

농진청 식품연구 수도권 회귀 논란… 전북 균형발전 역행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능, 민간 협업 명분으로 수원 이동 검토
2차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전북 식품·바이오 산업과 충돌 우려
농진청 "정상적 업무조정 과정"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난 2015년 경기도 수원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이 최근 식품연구 기능을 다시 수원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9일 전주KBS 뉴스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20일 이에 대한 본보의 취재 요청에 대해 농진청은 수도권 복귀가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조정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농진청은 전북 이전 후 10년 동안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사업비 중 일부를 전북 현안 해결에 투입하고, 지역 물품 우선 구매액 700억 원 이상을 집행했다. 2800명 이상의 일자리도 새로 생겼다.

이번 지침에 논란의 불씨가 된 것은 농진청이 업무조정을 통해 전북으로 이전한 기능을 수원으로 다시 옮기는 것이고, 하필이면 그 대상이 식품 연구 관련 부서라는 점이다. 식품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식품·바이오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 분야다.

농진청은 조직 기능을 통합·조정하면서 식품 생애종과 새로 환경 연구는 전주에서, 민간 협업이 필요한 식품 연구는 수원으로 옮기는 업무조정 과정인 만큼 다른 조직이 전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농진청 입장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기업을 포함한 민간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지방으로 이전한 기능을 민간 협업을 이유로 다시 수도권으로 옮기려는 것은 '불편하다는 표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덕이 식품관련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도 전북혁신도시에 있는데도 민간협업을 명분삼아 수도권으로 조직을 옮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농진청 산하에 있고 있는 업종과 관련 해서만하는 지적이다. 특히 향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수도권에 남은 일부 기능도 모두 전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전북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 여론의 압박이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전략으로, 한국바이오개발원, 농촌진흥원,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 7대 공제회 등 5개 기관을 후보군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차원에 농진청이 전북으로 이전해 온 기능을 수도권으로 되려 시키려는 행위라면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전북자치도의회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은 "전북은 농생명 수도이고, 바이오 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왜 또 수도권으로 돌려주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 수도권에 있는 모든 기관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전부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에서 식품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도 "전북은 땅이 크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에 있다. 수도권에 있는 식품 대기업 브랜드의 많은 물량이 전북에서 생산된다. 식품 생산기지인 전북을 내두고 인간협력을 이유로 수도권을 간다니 일하기가 힘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전주 시민 B 씨는 "국민연금공단처럼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기업문화를 뿌리 뽑고 반목하던 이전했다가 법을 고쳐가면서 어렵게 유치한 이전을 성사시켰지만, 기회만 있으면 수도권 이전 논리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 안타깝다"면서 "농진청이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소재홍기자

10 [2026.2.26. 입장문] "부산시, 제3금융중심지 딴지 걸지마" 전북도-도의회 정책왜곡 중단 촉구

새전북신문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002면 종합

"부산시, 제3금융중심지 딴지 걸지마"

전북도도의회, 정책왜곡 중단 촉구

전북도와 도의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또다시 반대하고 나선 부산시를 향해 딴지 걸지 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부산시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나눠먹기식 정책'이자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상을 흔드는 조처'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국가 금융정책의 방향을 협소한 지역경쟁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자, 사실 관계와 정책 취지를 왜곡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어느 지역의 기득권을 침해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연금이라는 국가 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운용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부산과 전북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 경쟁력을 함께 높여야 할 동반자"라고 목소리 높였다.

전북도의회 또한 균형발전특별위원회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나눠먹기식 정책'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몰이해이자, 기존 거점의 기득권만을 앞세운 주장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실 관계와 정책 취지를 왜곡하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지역간 갈등과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과 지역 상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달 말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있는 전북혁신도시 일원에 대한 금융중심지 지정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했다.

2019년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무산된데 이은 두번째 시도다. 서울 여의도(제1금융중심지·종합금융)와 부산 문현지구(제2금융중심지·해양파생금융)에 이은 국내 세번째 도전이기도 하다.

가부는 금융위 실사와 심의 등을 거쳐 올 6월께 결정될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전주매일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001면 종합

부산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반대"에 도내 정치권 '반발'

김관영 도지사 "분산 아닌 국가 금융경쟁력 확대 위한 전략"

도의회 균형발전특위 "서울 등 각자 장점 바탕으로 역할 분담"

부산시가 최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을 두고 "나눠먹기식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도내 정치권이 반발에 나섰다.

먼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은 지역 간 기능 분산이 아닌 국가 금융 경쟁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해당 주장에 대해 국가 금융정책의 방향을 지역 경쟁의 시각에서 해석한 것으로, 정책 취지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기존 금융 거점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기능 전문화를 통한 금융 생태계 고도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과 전북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 경쟁력을 함께 높여야 할 동반자"라며 "전북은 협력과 연대의 길 위에서 서울과 부산과 함께 금융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난이)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주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대한 반대 움직임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이 추진하는 금융중심지는 기존 금융 거점과 경쟁하거나 기능을 빼앗는 구조가 아니라, 서울·부산·전북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상생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나눠먹기식 정책'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몰이해이자 기존 거점의 기득권을 앞세운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

全北日報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002면 종합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국가 경쟁력 확장 전략"

김관영 지사, 부산 측 '나눠먹기' 비판에 반박
도의회 "기능 분담해 상호 보완성 구축" 주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과 관련, 부산 측의 반대 입장에 "금융중심지 분산이 아니라 국가 금융 경쟁력 확장 전략"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지사는 25일 낸 입장문에서 "최근 부산시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두고 '나눠 먹기식 정책'이자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상을 흔드는 조치'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가 금융정책의 방향을 지역 경쟁의 관점에서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주장은 부산지역의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기존 금융중심지의 기능을 분산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 금융 기능을 전문화하고 고도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서울은 종합금융, 부산은 해양·파생금융 특화 거점으로 자리 잡은 반면 전북이 추진하는 모델은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세계 3대 연기금 가운데 하나인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김 지사는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자산운용 산업을 집적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정책 설계"라며 "이를 단순히 지역 안배나 나눠 주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능 중복 우려에 대해서도 "부산의 해양·디지털·파생금융 전략과 전북의 연기금 기반 자산운용 특화 전략은 구조적으로 다르다"며 "자산운용은 특정 지역의 독점 영역이 아니고 연기금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전북이 가장 적합한 입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금융 기능 쏠림은 이미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다"며 "서울과 부산, 전북으로 이어지는 금융 3각 축은 대한민국 금융 지도의 외연을 확장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은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사안이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살린 역할 분담과 상호 보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위는 "전북 금융중심지 반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와 마찬가지로 특위 역시 서울은 종합금융, 부산은 해양·파생금융, 전북은 기금·자산운용 중심으로 기능을 분담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한 국민연금공단 입지와 KB·신한 금융타운 조성 등을 근거로 전북의 경쟁력을 제시하며 "상호 보완을 통한 국가 금융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金羅日報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001면 종합

"제3금융중심지, 나눠먹기 아닌 상생"

김 지사·도의회 부산 비판 반박
3각축 기능 특화 상호보완 주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최근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부산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25일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제3금융중심지는 분산이 아니라 국가 금융경쟁력 확장 전략"이라며, 최근 부산 지역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상을 흔드는 나눠먹기식 정책'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분산'이 아니라 '기능 고도화' 전략으로 서울은 종합금융 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금융 특화 거점, 전북은 금융중심지 모델은 국민연금공단을 기반으로 한 자산운용 특화 전략"이라며 "기존 금융중심지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금융 기능을 전문화하고 보완하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이라는 세계 3대 연기금이 위치한 전북에 자산운용 기능을 집적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정책 설계"라며 "부산의 해양·디지털·파생금융 전략과 전북의 연기금 기반 자산운용 특화 전략은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긋고 '지역 나눠주기식'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부산·전북으로 이어지는 금융 3각 축은 대한민국 금융 지도의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인 만큼, 부산과 전북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 보완적 금융 거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전주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국가균형발전 정책 전반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국가 금융정책의 본질을 왜곡하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용기자

11 [2025.7.28. 결의안] 도의회,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

전북도민일보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003면 종합

도의회,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5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대통령 공약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전북이 보유한 독보적인 연기금 기반 자산운용 생태계와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울-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중심지로 전북을 지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도는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성공적 이전을 계기로, 연기금 중심의 자산운용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이 과정에서 16개 금융기관 유치, 제2사옥 건립, 연간 340명 규모의 금융 전문인력 양성 체계, 핀테크 육성,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 현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이행계획은 여전히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사진)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서울-전북-부산을 잇는 균형 잡힌 금융 삼각축은 지방소멸 위기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아 기자

全北日報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003면 종합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이행하라"

전북도의회, 결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대통령 공약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전북이 보유한 독보적인 연기금 기반 자산운용 생태계와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울-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중심지로 전북을 지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은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성공적 이전을 계기로, 연기금 중심의 자산운용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이 과정에서 16개 금융기관 유치, 제2사옥 건립, 연간 340명 규모의 금융 전문인력 양성 체계, 핀테크 육성,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준비를 마쳤다.



국주영은 의원

그러나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 현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이행계획은 여전히 지연되는 상황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전북은 이미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12 [2025.6.12. 도정질문] "공공기관 유치단 전략·방식 쇄신을"

全北日報

●전북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도정 질문

"공공 기관 유치단 전략·방식 쇄신을"

"실적 없이 단순활동 대상기관 부정 의견 긍정적 인식 심어야"

정종복 도의원 지적



새 정부들어 수도권 집중화 해법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고 부처 및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 유치지원단이 이렇다 할 실적 없이 단순 유치활동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보다 많은 공공기관들의 전북이전을 위해 기관들로 하여금 이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등 전략적인 유치 활동을 벌여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11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전북도의 공공기관 유치지원단은 발족 후 유치 대상 기관에 대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전북이 핵심으로 분류하는 금융, 농생명 기관의 경우 단 하나의 기관도 긍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현재의 유치 방식과 전략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23년 3월 공공기관유치지원단을 발족해 7개 분야 55개 중점 유치 대상기관에 대한 실국별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대상 기관 및 지역이 구체화 될 예정인데, 지원단은 이에 맞춰 발족된 기구이다.

현재까지 지원단의 5차례의 유치활동 결과 보고 회의가 진행됐지만, 전북의 유치 대상기관 대부분은 지방 이전에 대한 부정 인식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55개 대상 기관중 대부분이 '부정' 또는 '어떤 계획 미검토'라는 응답의견을 보였고, 긍정적 의견은 1, 2개 기관에 불과했다.

그이유로 기관들은 노조 반발과 인력 이탈 등으로 지방 이전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고,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아니어서 지방 이전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 의원은 "이를 기준으로 보면 지원단은 발족 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다 할 성과 없이 기계적인 유치 활동만 전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또 전북이 핵심으로 분류하는 금융, 농생명 기관의 경우 단 하나의 기관도 긍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특성상 기관의 부정적 견해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것이지만, 현재 전북의 성적표는 초라함을 넘어 우려스러울 정도"라며 "현재의 유지 방식과 전략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이전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기관의 부정적 반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추진의지, 정치권과의 공조, 우리 도의 유치노력 등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이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중앙정부 대상 건의활동, 정치권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기관과의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한 유치활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백세종 기자

全羅日報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003면 종합

정종복"공기관2차 유치 전략 재정비"



정종복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A선)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활동이 2년 넘게 이어졌지만, 전북 이전에 긍정적 답변을 준 기관은 한두 곳에 불과하다"며 전북도의 전략 부재와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중점유치 기관 55곳 중 대다수가 부정적이거나 검토 계획조차 없다는 입장"이라며 "단순한 기계적 유치 활동이 아닌, 기관별 성격에 맞춘 맞춤형 전략과 실현 가능한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국제금융센터 착공 지연, 법 개정이 필요한 전략 구상 등을 들어 "실현 가능하지 않은 전략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냉철한 전략 재정비를 주문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기존 유치 전략을 점검하고, 기관 특성을 반영한 접근법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정책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정치권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성조기자

전북중앙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003면 종합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정적… 획기적 유치전략 내놔야"

정종복도의원 도정질문
기관별 유치방식-접근 조언
마사회 시군갈등해결이 먼저



정종복(전주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1일 "전북도의 공공기관 유치 방식과 전략을 대대적으로 쇄신해 분위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제419회 정례회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 질문을 통해 "도는 2023년 공공기관 유치 지원단을 발족해 실·국별 기관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성적표는 초라함을 넘어 우려스러울 정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원단 회의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대부분은 지방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북이 핵심으로 분류하는 금융, 농생명 기관은 단 한 곳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핵심 기관 중 한국자산신탁, IBK자산운용, 농협은행 등 정치권과 공조하는 게 더 중요한 기관도 있고 시장 논리로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인 기관도 있다"며 "민간과 공공, 정관 개정 필요 기관과 법률 개정 필요 기관 등으로 나눠 접근하는 전략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 유치를 놓고 도내 일부 시·군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전 갈등을 종결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도지사는 "금융·자산운용, 농생명, 국토·미래산업, 중소기업 등 7가지로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분류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공조하고 정부에 건의도 하면서 공공기관 성격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기관 유치나 기관 이전 부지 등과 관련해 일부 시·군 사이 이견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도내 모든 구성원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하고, 유치 전략과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최대한 많은 전북 몫을 찾겠다"고 부연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전민일보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003면 종합

"전북도,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 전면 쇄신 필요"

도의회 정종복 의원, 제419회 정례회서 문제 제기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이 현실성과 실효성을 결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정종복 의원(사진·전주 3,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41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2년 넘게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진전 없이 기계적인 방식에 머물고 있다"며 전략의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 "공공기관유치지원단이 총 5차례 활동 보고를 했지만, 유치 대상 56개 기관 대부분이 지방 이전에 부정적이거나 아예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도가 핵심 목표로 삼는 금융 및 농생명 분야 기관들조차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 유치 전략은 초라함을 넘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이전 특성상 일정 부분의 저항은 예상된 일이지만, 그에 대비한 전략은 부족하다"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어떤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유치 대상 기관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 전략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일부 기관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구조이고, 또 일부는 민간에 가까운 조직으로 정치권 공조나 시장 논리에 기반한 접근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단순한 기관 분류를 넘어 △법률 vs 정관 △본사 vs 산하기관 △민간 vs 공공의 기준에 따른 세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도가 제시한 유인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금융산업 지원기구 설치나 국제금융센터 입주 혜택, 특례 제공 등의 전략은 경쟁력 있어 보이지만, 정작 전북국제금융센터는 아직 착공도 되지 않았고, 지역채용 의무화 완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과 공공기관 모두가 실현 가능성을 의심할 유인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지원책은 과감히 제외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도는 더 이상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유치전략'을 반복하지 말고, 실행력을 중심에 둔 과감한 리빌딩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홍식기자

13 [2025.10.21. 5분 발언] 최형열 '대광법 개정안 의결 따라 신속 후속 조치를'

전북도민일보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002면 종합

최형열 "대광법 개정안 의결 따라 신속 후속조치를"

전북특별자치도가 교통 오지라는 꼬리표를 떼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단 한 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전략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20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과 시행령 의결에 따른 신속하고 전략적인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2019년 7월 시작된 대광법 개정의 길은 수많은 난관 속에서 끈질긴 노력, 연대와 공조로 비 광역시 최초 국가 광역교통망 편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일으켰다"며 "더욱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전북은 법과 제도로써 '단일 광역권'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닌 시작임을 강조하며 "도가 9월 초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는데, 국가 계획 반영,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착수에 이르기까지 단 한 순간의 방심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 높이며 전략적 대비를 촉구했다.

김성아 기자

全北日報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003면 종합

"전북 발전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 사활 걸어야"

최형열 도의원 5분 발언

전북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20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이 확정 의결됨에 따라 전북이 단일 광역권으로 인정받게 됐고, 전북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로드맵이 완성됐다고 안심해서는 안되며, 국가 계획 반영,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착수에 이르기까지 단 한 순간의 방심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북광역권 사업들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가 9월 초 광



역교통시설 사업 계획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며 "광역로와 광역철도 등 총 15개 사업에 총사업비 2조 1916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가 도정 운영의 선택과 집중 및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조달계획 수립 등 행정력 집중과 전략적 대비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최 의원은 "새만금 개발, 국제공항 건설 등의 경우처럼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선거용 공약, 도민의 희망 고문으로 전락했던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全羅日報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003면 종합

전북도, 광역교통망 확충 첫발
최형열 "행·재정 총동원 추진"



전북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더불어민주당·사진)은 20일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북 광역교통망 확충은 이제 막 첫발을 뗀 것일 뿐, 앞으로가 진짜 시작"이라며 "전북도가 행정력과 재정을 총동원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북은 지난 4월 비(非)광역시 최초로 국가 광역교통망에 편입돼, 10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확정됨으로써 법적 '단일 광역권' 지위를 획득했다"며 "이는 교통·산업·문화·생활권이 하나로 연결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황성조기자

새전북신문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002면 종합

"광역교통망 구축 사활 걸어라"
최형열, 대광법 실행 골든타임 사수 주문

■ 전북자치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최근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정비 작업이 마무리 된 가운데 앞으론 그 실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형열(전주5·사진)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20일 개회한 제422회 임시회 자유발언대에 올라 "2019년 7월 시작된 대광법 개정의 길은 수많은 난관 속에서 끈질긴 노력, 연대와 공조로 비광역시 최초로 국가 광역교통망 편입이란 역사적 사건을 일으켰고 법과 제도로써 전북이 '단일 광역권'을 인정받게 된 만큼, 전북도는 앞으로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사업안 국가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 조사, 그 착수에 이르기까지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대광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공포와 함께 이달 14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개정 작업이 완료됐다. 이로써 전주를 비롯해 익산, 김제, 완주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정돼 국가 차원에서 대도시에 준한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지원받게 됐다.

최근 전북도는 총 2조1,916억 원대에 달하는 사업안 15건을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에 제출했다.

사업안은 전주 에코시티~완주 삼봉지구간 지방도 확포장, 전주 효자동~김제 금구면간 광역도로 신설, 전주 송천동~완주 삼례읍간 도로 신설,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간 광역철도 구축, 전주·완주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KTX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신설 등이다.

현재 익산, 김제, 완주에서 전주를 오가는 통행량은 하루 평균 약 40만 건에 이른다.

최 의원은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면 교통, 산업, 문화와 생활권이 연결되는 획기적 변화를 일으키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에 이르기까지 전북발전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전북도가 사즉생의 각오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학 기자

⑭ [2026.2.6. 5분 발언] 서난이 도의원 "전북~세종 30분 교통망 구축, 전북 생존전략 될 수 있다"

全羅日報
HOME > 정치 > 행정·의회

서난이 도의원 "전북~세종 30분 교통망 구축... 전북 생존전략 될 수 있다"

A 황성조 기자 | ⓒ 승인 2026.02.06 16:38

- 5극3특·초광역 경쟁 속 '샌드위치 위기' 진단
- 금융·행정·입법 기능 결합한 단일권역 전략 제안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초광역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전북이 독자 노선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어 세종과의 교통망을 축으로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6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5극3특 체계와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 속에서 전북은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전북~세종 단일 권역 구축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의 흐름이 통합과 초광역 경쟁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인접 지역이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며 대규모 국가 지원을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전북 역시 새로운 성장 축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해법으로 제시된 것은 '전북~세종 30분 교통망'이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행정의 중심이 세종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전북은 세종을 새로운 확장 축으로 삼아야 한다"며 "초광역 교통망을 기반으로 전북의 금융 기능과 세종의 행정·입법 기능을 결합한 전략적 권역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금융 기능 강화 가능성도 강조했다.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한 자산운용 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에 더해 금융기관 집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세종과의 연계는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기능의 결합이라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교통망은 공간의 경계를 바꾸고 경제권을 재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전북 내부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는 현실 과제 위에 세종 연결이라는 비전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의 기반이 마련된 점을 언급하며, 이를 발판으로 전북~세종 연결 구상을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전북이 소외론을 넘어 국가 성장축의 한 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며 "전북~세종 금융·행정·입법 단일 권역 구축을 위한 도 차원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광역 경쟁이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전북이 어떤 공간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산업과 인구, 공공기관 배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망을 매개로 한 권역 확장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성조 기자 food2drink@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